

2026년
경제경영
환경전망



Contents

1. 경제환경	3
2. 산업환경	22
3. 중소기업·소상공인환경	34

1. 경제환경

Intro [세계] : 위험의 파생 (Derivation of Risks)

세계경제 분절화로부터 촉발된 위험 요인들이 결핍·과잉·불안의 형태로 파생되어 실물경제에 영향

- (결핍) 전력공급 부족 현실화,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따른 첨단산업 충격, 기후변화와 맞물린 애그플레이션과 식량 무기화 현상 발생
- (과잉) 구조적(복지·국방 등) 비용 및 이자비용에도 재정팽창을 통한 생존에 몰두, 유동성 과잉 상황에서 관리·활용 역량이 국가 간 성장 격차를 확대
- (불안) 표면적 협력 뒤에 불신과 상호 견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방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글로벌 협상으로 실질적 갈등의 봉합은 요원

불확실한 경제환경이 이어지며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정책 효과가 반감되어 장기적 성장둔화 우려 확대

- 결핍·과잉·불안이 상호작용하여 국가 간 경쟁이 과열되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과 경제 불확실성을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
- 이로 인해 가계·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정부의 정책 대응력이 저하되어 구조적 저성장 국면으로 전환될 우려 확대



Intro [세계] : 위험의 파생 - 결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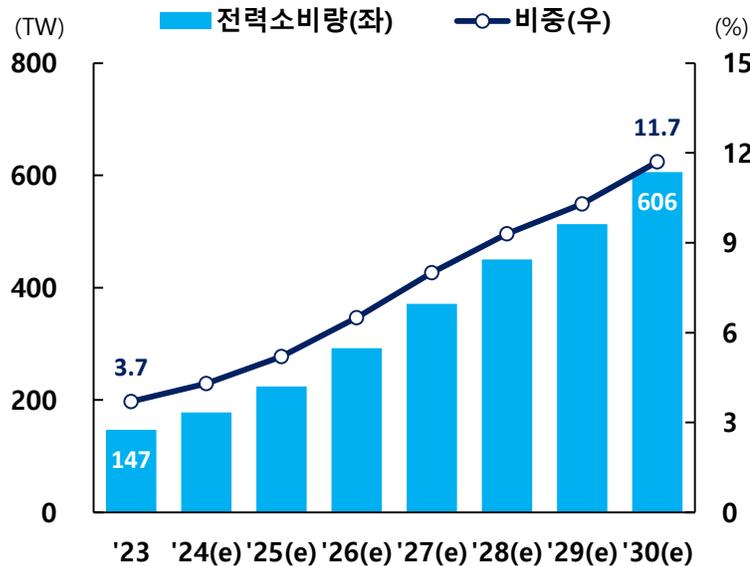
분절화 이후 성장을 위한 핵심자원들이 전략자원화 되면서 쟁탈의 대상으로 변모

- AI 패권 및 생산성 확보의 기반이 되는 전력, 미래산업의 핵심자원으로 부상한 희토류,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주권, 혁신을 주도할 인재 등이 결핍의 대상이 됨
- 단순히 공급망 문제를 넘어서 미래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자원의 결핍이 국가 간 성장 격차를 만들어냄으로 인해 국가 간·기업 간 경쟁이 심화

기술 및 데이터 주권상실·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금융 및 투자자원의 편중 등이 결핍을 증폭시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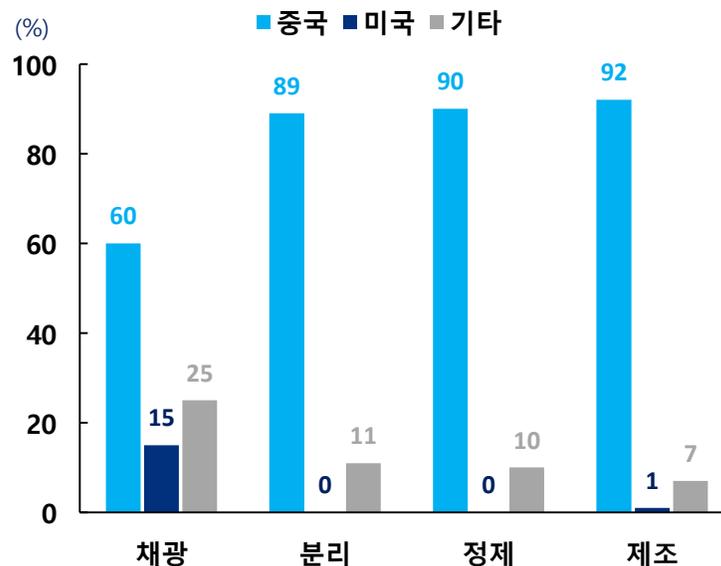
- 기술의존도가 심화되는 환경에서 국가 간 원천기술 보유 격차가 새로운 종속 관계를 형성하며 데이터 주권이 국가안보와 직결
- 높은 기술인력 수요에도 첨단 및 숙련 인력 부족은 만성적 상태인 반면, 전통적 산업에서는 구조조정과 자동화로 잉여인력 문제 발생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험 확대로 투자 자본이 특정 국가와 소수의 기업에 집중되면서 성장기회의 편중으로 이어짐

美 데이터센터 전력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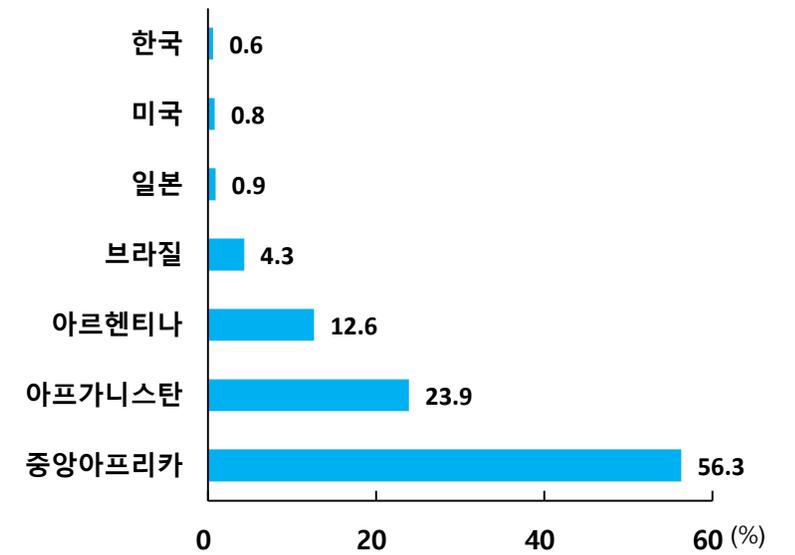
주 : e는 전망치, 비중은 전체 미국 전력 소비 중 데이터센터 해당분
 자료 : McKinsey&Company

희토류 생산공정 점유율



주 : 영구자석 기준, 채광은 '20년·나머지는 '21년말 기준
 자료 : 외교부

식량문제 인구비율



주 : '17~'23년 평균, 총 인구 중 심각한식량문제(가계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의 성인이 식사를 걸러야 하는 상황)를 겪는 인구 비율
 자료 : World Bank

Intro [세계] : 위험의 파생 - 과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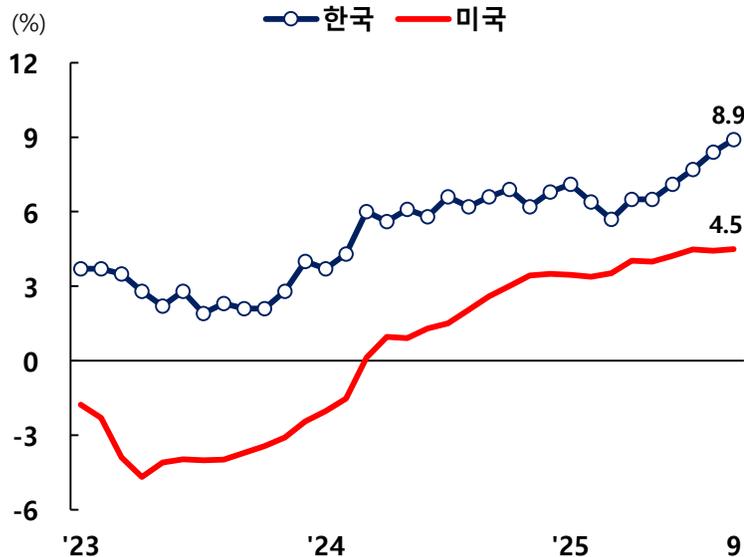
재정건전성과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세계 각국은 재정지출을 통해 당장의 위기 모면에 집중

- 고령화에 따른 복지 증진, 국방비 증가 등을 위해 과거와 달리 일시적 경기 대응 수준이 아닌 구조적 재정 확장으로 전환
 - 통화정책 완화까지 더해지며 시장 내 유동성은 과잉상태이나, 넘쳐나는 유동성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보다 자산시장 과열*과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
- * 위험자산인 주식·비트코인 뿐 아니라 안전자산인 금·은 등의 원자재까지 역대 최고가격을 연일 갱신하며 상호 대체성을 가진 자산의 가치가 모두 상승

유동성 관리 및 활용 역량에 따라 국가 간 성장 격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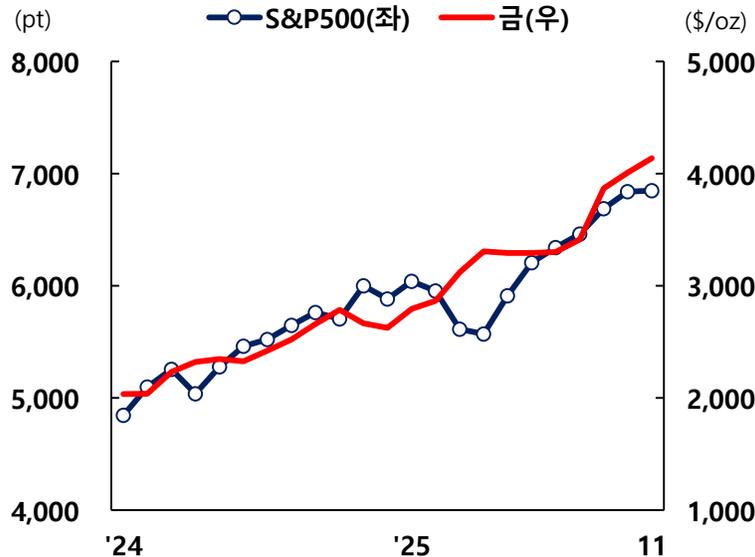
-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상황에서, 그 관리 및 활용 역량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
- 팬데믹 이후 급증한 국가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은 GDP 대비 부채비중이 큰 국가(英·佛·日)들을 중심으로 유동성 압박을 가중
- 사상 최고 수준의 유동성을 활용해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있지만 특정분야에 과잉 편중되어 있으며, 수익 창출 없이 자금 순환만 반복될 경우 구조적 위험 초래 가능

광의통화(M2)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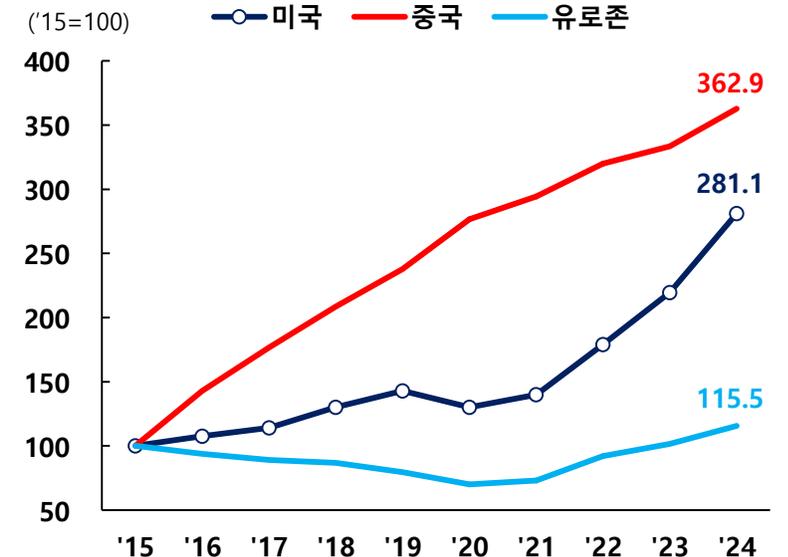
주 : 전년 동기 대비, M2는 협의통화·MMF·2년 미만 발행
어음 등 포함
자료 : 한국은행, FRED

주식·금 가격변화



주 : 월말 증가 기준
자료 : 증권거래소, FRED

정부 이자비용 지출



주 : '15년 수치를 100으로 설정하여 재계산
자료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ECB, CEIC

Intro [세계] : 위험의 파생 -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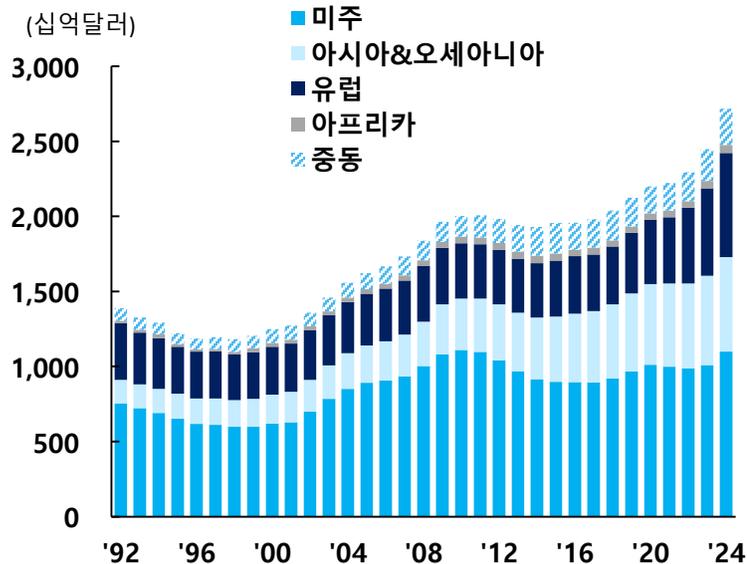
표면적으로는 평화와 협력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진행중이나 그 이면에는 깊은 불신과 상호견제가 지속

- 美-中을 큰 축으로 하는 글로벌 다극화는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경쟁과 견제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냄
 - ※ 과거와 달리 중국은 자원의 무기화, 성공적 공급망 재편,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미국의 압박에도 강경한 대응을 계속 이어나갈 것
 - 인도, 브라질 등 미국에 비협조적인 브릭스 국가들도 중국을 중심으로 경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 될 우려
-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국제협상은 당사자들이 자국 이익 보호에 집중하게 만들고 정보 비대칭과 불신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증대시킴

협상 체결 이후에도 글로벌 신뢰 하락에 따른 불안은 여전하며 협력을 위한 비용과 위험은 지속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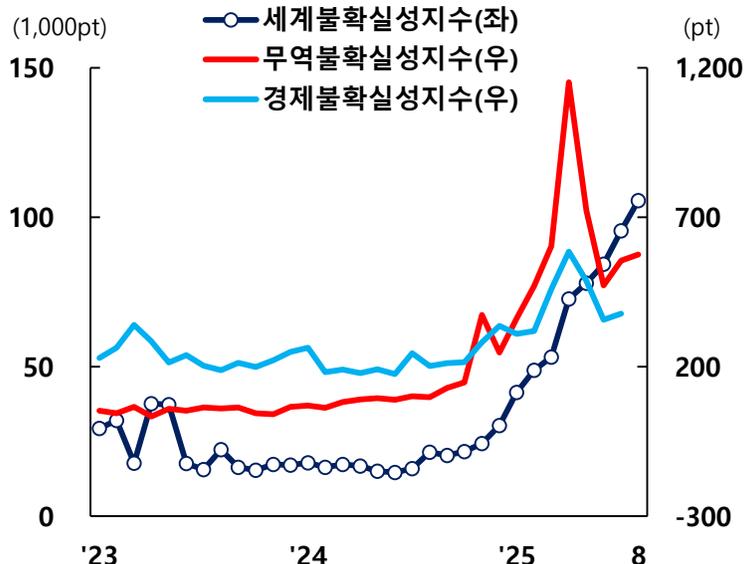
- 對美관세 및 분쟁지역(가자지구, 러-우전쟁) 협상 등에서 '합의-충돌'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면서 글로벌 협력을 위한 비용 지출 지속
- 관세협상 역시 타결에 대한 불확실성만 제거되었을 뿐 글로벌 무역갈등이 계속되며 이에 따른 물가상승*·글로벌 공급망 재편·對美수출 감소 등의 불확실성 잔존
 - * "올 하반기 미국 경제 관세 인상의 영향이 점차 나타나며, 美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 3%를 상회할 전망"(25.7월, 한국은행)
- 현재의 지정학적 불안은 전통적(군사) 안보영역을 넘어서 보건·기후·기술 등의 비전통적 분야까지 확장*되면서 글로벌 효율성을 저해
 - * 감염병 확산, 국제적 기후 대응 지연, 기술협력 약화로 인한 기술 발전 위축 등

대륙별 국방비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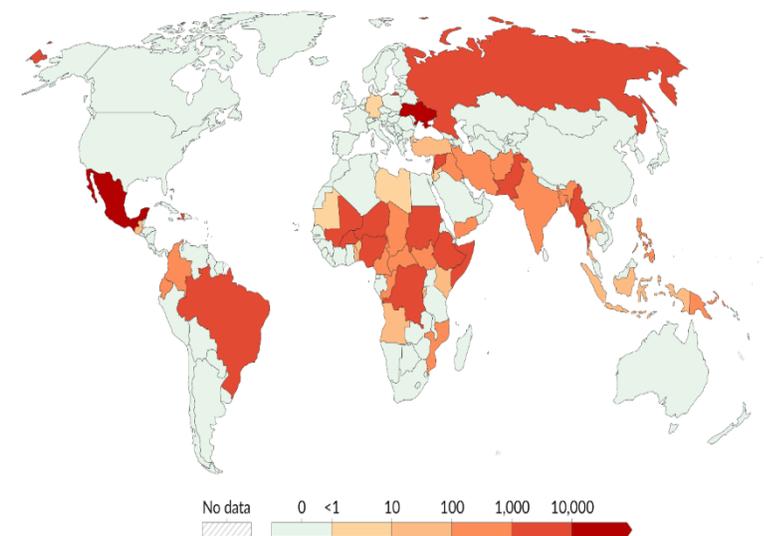
자료 : SIPRI

글로벌 불확실성 지수



주 : 각 불확실성과 관련된 단어가 글로벌 뉴스·미디어에 노출된 빈도를 측정하여 산출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5.10월)

분쟁지역 사망자 현황('24년)



주 : 국가 간 갈등, 내전, 분쟁 등에 의한 군인·민간인 사망자 수
자료 : OWID

□ 세계경제 [총괄]

(현황)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며 국가별 성장은 파편화된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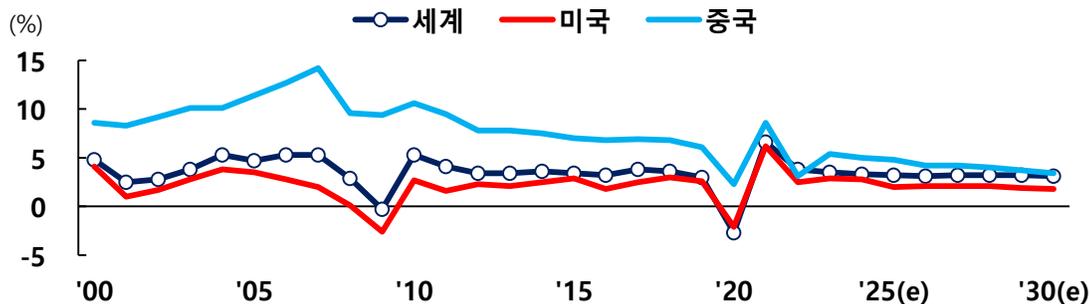
-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는 듯 보였으나, 중국·유럽 등의 보호무역 강화로 글로벌 교역 리스크는 여전히 큰 상황
- 美-中 패권전쟁 지속, 중동 지역 갈등 심화, 러-우 전쟁 종전 지연 등 지정학적 불안도 장기화
- 국가 간 펀더멘탈·정책 차이가 글로벌 리스크 대응 여력 차이로 이어지면서 국가별 경기 향방도 차별화

(전망) 국가 간 장벽이 강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재정건전성 우려도 확대되며 글로벌 경기는 올해보다 둔화

- (상방요인) 완화적 통화정책 및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국제유가 안정세 지속, 글로벌 AI 투자 확대
- (하방요인) 관세 영향 본격화에 따른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 확대 및 對美 수출국들의 수출 둔화, 주요국의 재정 부담 증가
- (리스크) 통상분쟁 및 지정학적 갈등 심화, AI 과잉투자 우려, 공급망 교란·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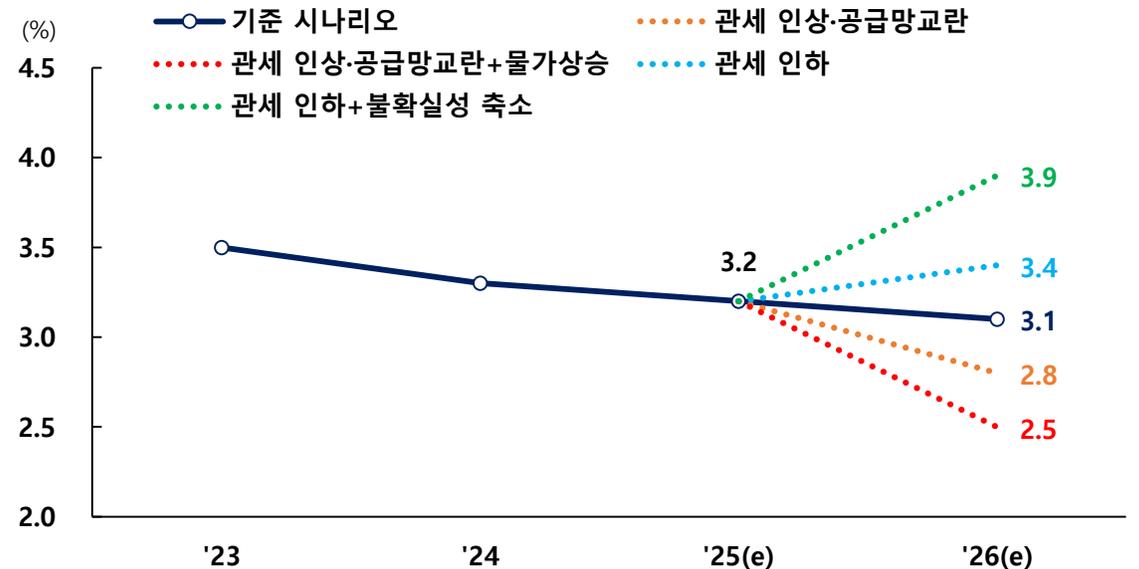
세계 경제성장률

(%)	'24년	'25년 ^e	'26년 ^e
세 계	3.3	3.2	3.1
미 국	2.8	2.0	2.1
중 국	5.0	4.8	4.2
일 본	0.1	1.1	0.6
유로존	0.9	1.2	1.1



주 : e는 전망치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5.10월)

시나리오별 '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주 : IMF의 시나리오별 GDP 변화율 전망을 사용하여 재계산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5.10월)

(현황)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물가·고용 불안에도 소비 중심의 성장세 유지

- 관세 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가계 심리위축* 등으로 소비지출 증가 폭은 둔화했으나, 여전히 완만한 증가세** 유지

* 소비심리지수(미시간대) : 74('24.12) → 71('25.1) → 52(4) → 62(7) → 54(10) → 50(11) / ** 개인소비지출(전기비연율, %) : 3.9('24.Q2) → 4.0(Q3) → 3.9(Q4) → 0.6('25.Q1) → 2.5(Q2)

(전망) 민간소비 둔화 및 노동시장 위축에도 AI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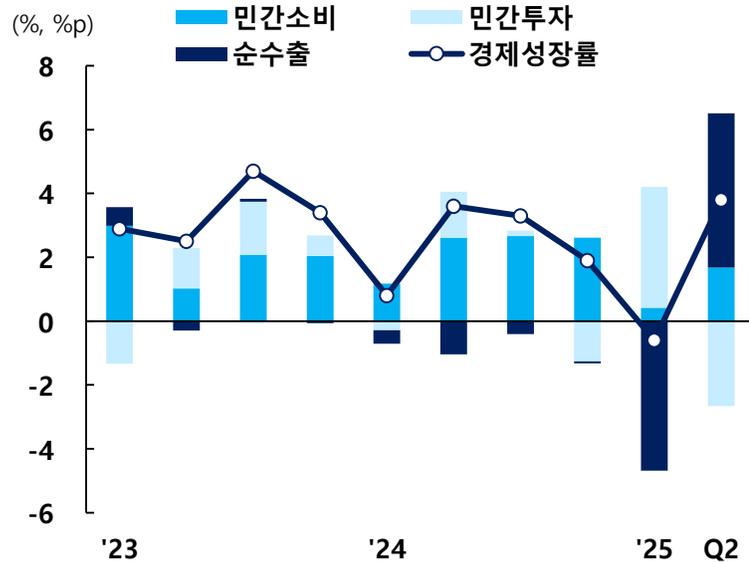
-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가계 소비여력 축소 및 민간소비 둔화
- 이민제한 정책 등이 노동 공급을 제약하여 실업률 상승은 제한적이나,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기업의 노동 수요 감소 및 노동시장 위축은 불가피
- 정부 재정 악화* 우려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및 이자 부담 증가 역시 성장의 하방 리스크

* GDP 대비 정부부채(%) : 108.2('19) → 132.0('20) → 124.7('21) → 118.8('22) → 119.0('23) → 120.8('24)

- 기업의 AI 관련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투자 촉진 지원** 정책 효과까지 더해지며 민간투자 확대 예상

* 민간 AI 투자계획 : 스타게이트 프로젝트(5,000억달러), 메타(720억달러) 등 / ** OBBBA 첨단산업 지원확대(반도체 생산시설투자 세액공제율 25→35% 상향)

경제성장률 기여도



주 : 막대그래프는 부문별기여도(%p), 전기 대비 연율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가계 구매력·물가상승률



주 : 전년 동기 대비, 근원PCE물가지수는 식품 및 에너지 제외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노동시장



주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Bureau of Labor Statistics, F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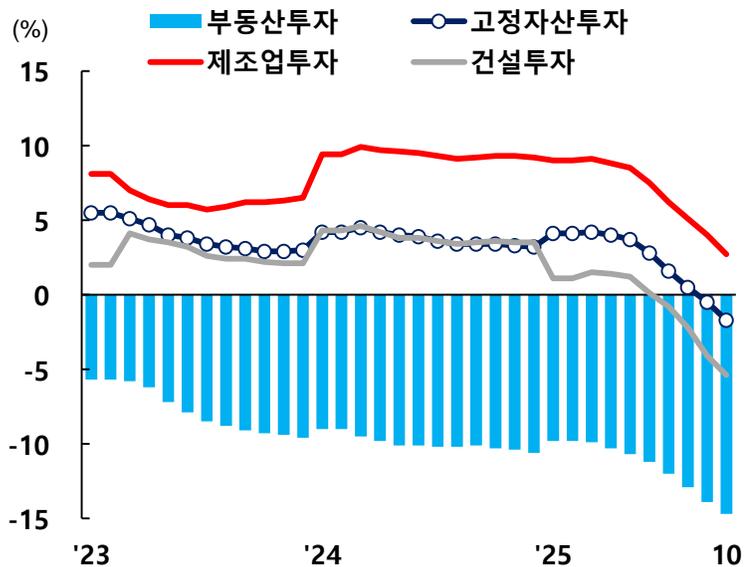
(현황) 정부 주도의 성장률 제고 노력이 이어졌으나, 부동산·내수 전반이 둔화하며 성장 정체

- 세계최대 규모의 댐 착공('25.7월, 한화 240조원 규모) 및 하반기 이구환신* 예산(한화 27조원 규모) 배정 등을 통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 노력 지속
 - * 中 정부가 '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노후한 설비나 소비재(가전, 차량 등)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원·장려하는 제도
- 그러나, 부동산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내수부양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한편, 美 관세發 조기선적 효과 역시 축소되면서 대내외 수요가 모두 둔화

(전망) 내수 부진 지속, 디플레이션 압력 확대, 관세 영향에 따른 수출 둔화로 '26년에도 경기 둔화 지속

-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고, 낮은 임금상승률*과 높은 청년실업률**에 따른 소비 위축도 지속되며 수요發 디플레이션 압력 확대
 - * 공공부문 임금상승률(전동비, %) : 9.7('21) → 6.7('22) → 5.9('23) → 2.8('24) / ** 청년실업률(%) : 16.1('25.1) → 16.9(2) → 16.5(3) → 15.8(4) → 14.9(5) → 14.5(6) → 17.8(7) → 18.9(8) → 17.7(9) → 17.3(10)
 - ※ 물가상승률(전동비, %) : 0.5('25.1) → △0.7(2) → △0.1(3) → △0.1(4) → △0.1(5) → 0.1(6) → 0.0(7) → △0.4(8) → △0.3(9) → 0.2(10)
- 수출은 관세 영향 본격화로 對美 수출을 중심으로 둔화하겠으나, 우회수출 및 수출선 다변화 노력 등이 둔화 폭을 축소
 - ※ 수출(전동비, %) : 6.0('25.1) → △3.0(2) → 12.4(3) → 8.1(4) → 4.8(5) → 5.8(6) → 7.2(7) → 4.4(8) → 8.3(9) → △1.1(10)

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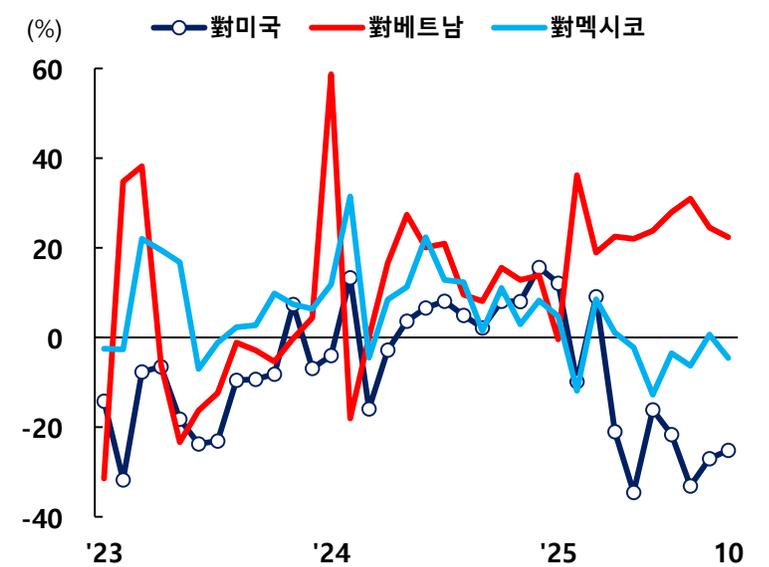
주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국가통계국

소매판매·산업생산 증가율



주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국가통계국

국가별 수출 증가율



주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해관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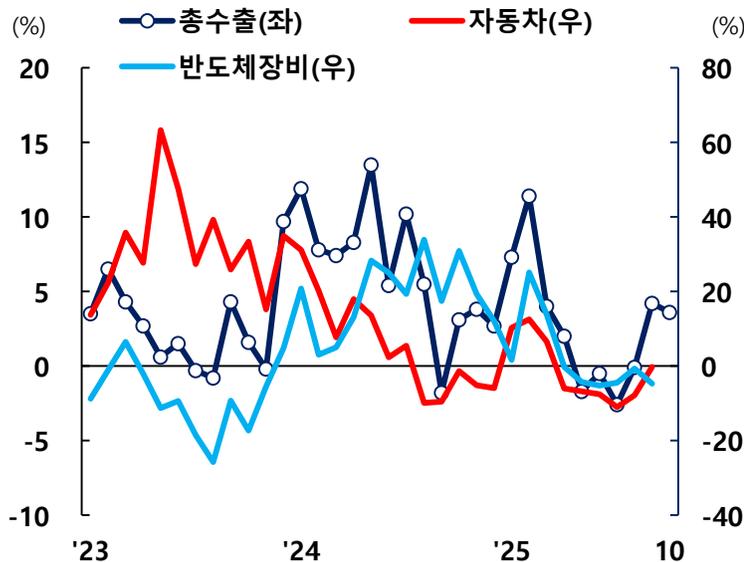
(현황) 수출 부진 및 엔저 지속에도 견조한 설비투자과 소비 증가로 양호한 성장 기록

- 관세로 인한 수출 부진과 엔저* 지속에 따른 기업수익 악화에도 인력부족 대응·디지털 전환·노후설비 교체 등을 위한 설비투자** 지속
 - * 엔/달러 환율(엔) : 87.7('10) → 106.8('20) → 151.6('24) → 152.4('25.Q1) → 144.7(Q2) → 147.4(Q3) / ** 일본은행 9월 단칸조사기준 설비투자계획 전동비 11% 증가
-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소비 증가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도 내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
 - * 서비스소비(전동비, %) : 3.0('25.1) → 0.6(2) → 1.4(3) → 2.0(4) → 1.8(5) → 3.0(6) → 1.3(7) → 1.6(8) → 2.1(9)
 - ** 방일외국인(전동비, %) : 40.6('25.1) → 16.9(2) → 13.5(3) → 28.5(4) → 21.5(5) → 7.6(6) → 4.4(7) → 16.9(8) → 13.7(9) → 17.6(10)

(전망) 수출 부진은 점진적 완화되나, 고물가에 따른 소비 둔화·정부 재정부담 심화로 0%대 성장률에 그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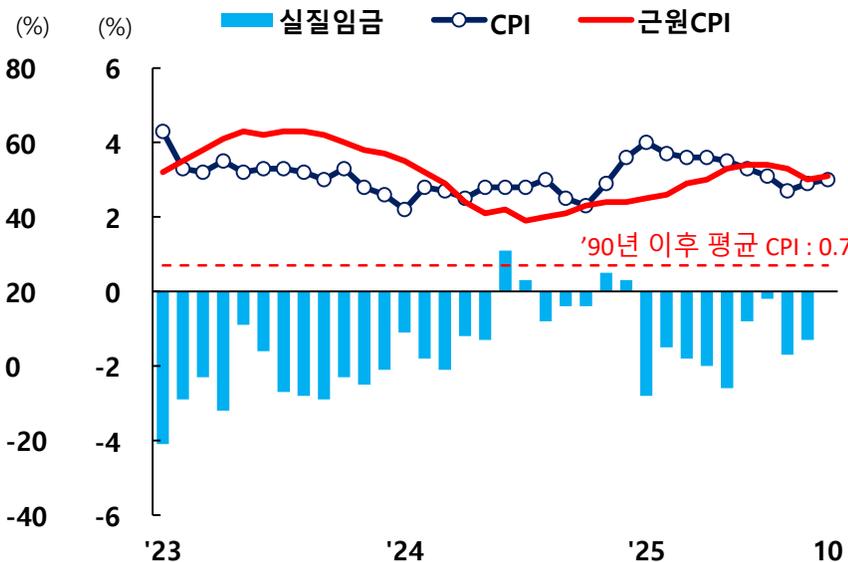
- 자동차·반도체장비 등을 중심으로 완만한 수출 개선이 예상되나, 고물가 지속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으로 민간소비 위축
- 국채 발행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 확대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효과도 제한적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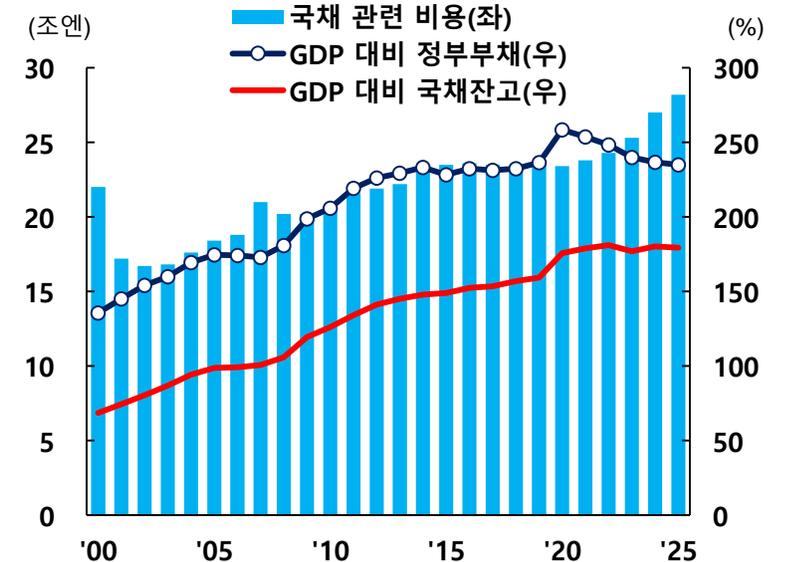
주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재무성, 한국무역협회 자료 기준 추산

임금·물가 상승률



주 : 1) 전년 동기 대비, 2) 근원CPI는 신선식품 및 에너지 제외
자료 : 후생노동성, 총무성

정부 재정건전성



주 : 1) 국채 관련 비용은 발행 및 이자 비용, 2) '25년은 7월 기준
자료 : 재무성

(현황) 금리 인하·양호한 고용 시장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점진적 개선

- 미국의 관세 부과, 프랑스 정치불안* 등에도 완화적 통화정책과 고용호조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 흐름 지속

* (프랑스) 정치적 불확실성, 재정적자 우려가 확대되며 신용등급이 A+(S&P)로 강등되고, 높은 수준의 장기 국채 금리 지속 등 불확실성 확대

※ 유로존 소매판매(전동비, %) : $\Delta 0.2('23) \rightarrow 1.3('24) \rightarrow 2.8('25.Q1) \rightarrow 3.3(Q2) \rightarrow 2.5(Q3)$, 유로존 경제성장률(전동비, %) : $0.4('23) \rightarrow 0.9('24) \rightarrow 1.6('25.Q1) \rightarrow 1.5(Q2) \rightarrow 1.3(Q3)$

(전망) 내수는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세 및 재정건전성 우려 등으로 성장률 소폭 하락 전망

- 견조한 고용시장 및 물가* 안정세 지속이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중심의 회복 흐름이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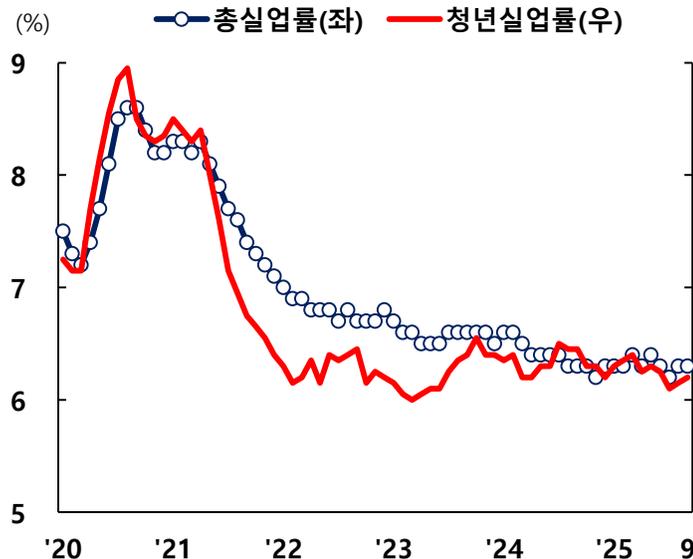
* 유로존 소비자물가(전동비, %) : $2.4('24) \rightarrow 2.1('25^e) \rightarrow 1.7('26^e)$ / ** '25.9월 기준, 향후 1년 가계소비 증가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 67.7% (ECB, 독일 등 유로존 5개국 대상 소비심리 조사)

- 다만, 美 관세 영향 본격화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프랑스 등 주요국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기업 투자 위축 등은 리스크 요인

- 높은 정부부채 비율로 적극적 재정정책 시행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일 등의 방위비 증액 정책 역시 경제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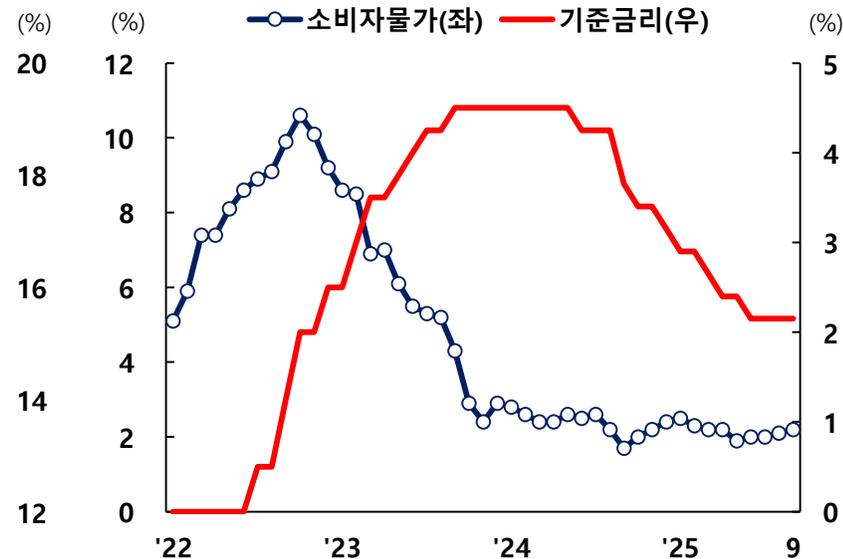
* 방위비 지출은 수입의존도가 높아(이탈리아 59%, 독일 24%) 국내 생산유발 효과가 낮고,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고용 창출 효과도 낮음 (MPRA)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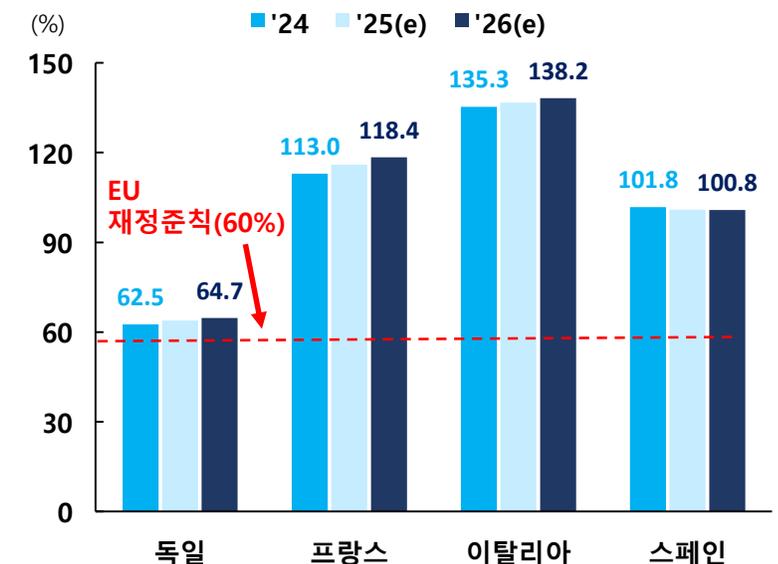
자료 : Eurostat

물가·기준금리



주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Eurostat

GDP 대비 정부부채



주 : e는 전망치
자료 : Eurostat

(현황)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로 인한 수출 증가, 견조한 소비·투자를 기반으로 성장 지속

-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기조 아래 중국이 주도하던 세계의 공장 역할 일부를 대체하며 수출 증가세 지속
- 높은 임금상승률*과 낮은 실업률** 등에 힘입은 견조한 소비,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와 FDI 증가로 고성장 지속

* '25년 임금상승률(전동비, %) : (인도) 9.5^e, (인니) 6.3^e, (베트남) 6.7^e, (폴란드) 6.2^e, (전세계) 2.7^e

** '25년 실업률(%), IMF·OECD : (인도) 4.9^e, (인니) 5.0^e, (베트남) 2.5^e, (폴란드) 2.8^e, (전세계) 6.6^e

(전망)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 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투자 확대로 성장세 유지

- 국가부채* 관리를 통한 국가 신용등급** 유지·강화, 해외자본의 공공·직접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투자처로의 전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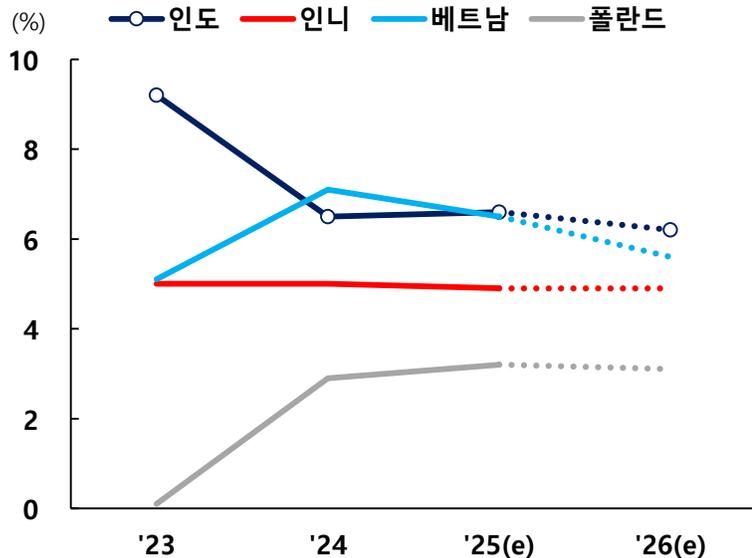
* 정부부채(GDP 대비, %, IMF) : (인도) 80.4('25^e) → 79.6('26^e), (인니) 41.0('25^e) → 41.0('26^e), (베트남) 33.6('25^e) → 34.9('26^e), (폴란드) 60.7('25^e) → 64.3('26^e)

** 신용등급(S&P) : (인도) BBB-('24) → BBB('25), (인니) BBB('19~), (베트남) BB+('22~), (폴란드) A-('18~) / *** 보조금 지급,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및 국부펀드 조성

- 사회간접자본 및 사회복지(교육, 의료, 연금 등) 등의 투자 확대,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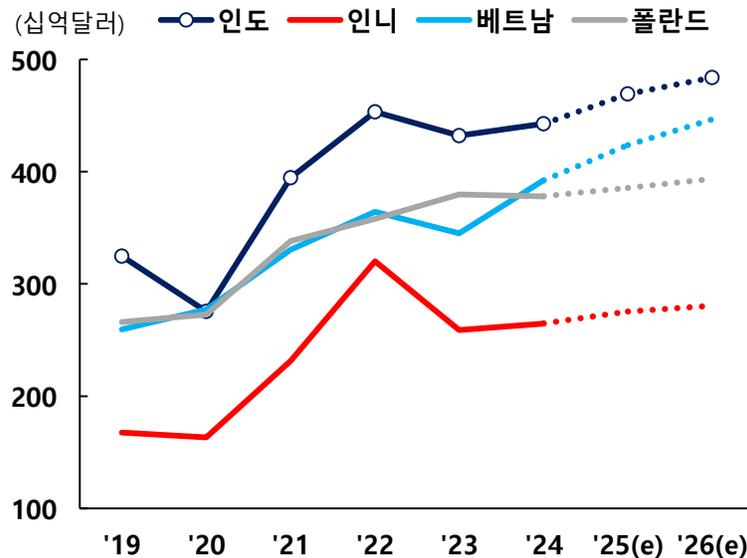
※ 국내총투자(전동비, %, OECD) : (인도) 6.5('25^e) → 8.5('26^e), (인니) 3.9('25^e) → 5.8('26^e), (베트남) 7.6('25^e) → 8.0('26^e), (폴란드) 4.5('25^e) → 6.4('26^e)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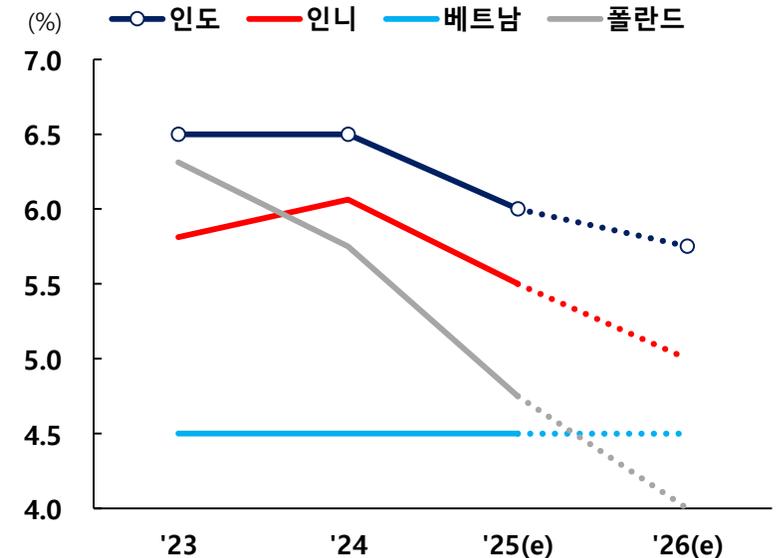
주 : e는 전망치,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IMF('25.10월)

수출



주 : e는 전망치
자료 : IMF(현황), OECD(전망)

기준금리



주 : e는 전망치
자료 : OECD('25.6월)

Intro [국내] : 위험의 고착 (Entrenchment of Ris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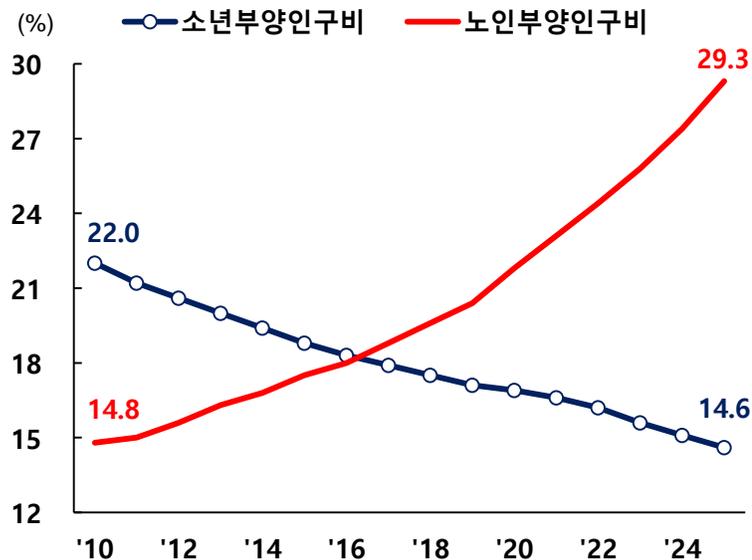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성장동력 결핍-부채 과잉-지경학적 불안 지속' 등의 구조적 위험에 직면

- **(성장동력 결핍)** 비효율적 자원배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 산업 구조조정** 지연
 *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조, 대기업에 집중된 자원배분 등 / ** 제조업에 집중된 산업구조·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등
- **(부채 과잉)** 가계부채 누증, 정부부채 증가세 지속, 한계기업·PF대출** 문제 잔존
 * 전체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 비중(%), 한국은행) : 15.3('20) → 14.9('21) → 15.5('22) → 16.4('23) → 17.1('24)
 **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 2.17('23.Q2) → 2.42(Q3) → 2.70(Q4) → 3.55('24.Q1) → 3.56(Q2) → 3.51(Q3) → 3.42(Q4) → 4.49('25.Q1) → 4.39(Q2)
- **(지경학적 불안)**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지속,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및 통상 압력 불확실성 지속

내재된 구조적 문제들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면서 장기적 저성장 우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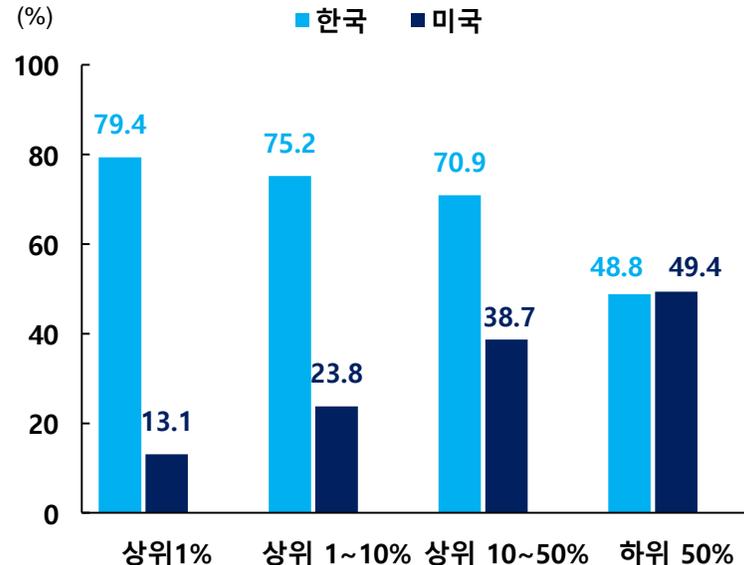
-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한국 또한 다른 형태의 결핍·과잉·불안에 직면
- 구조적 위험들은 단기간 내 해소할 수 없어, 정부의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 및 민간부문의 적극적 자구책 확보 필요

부양인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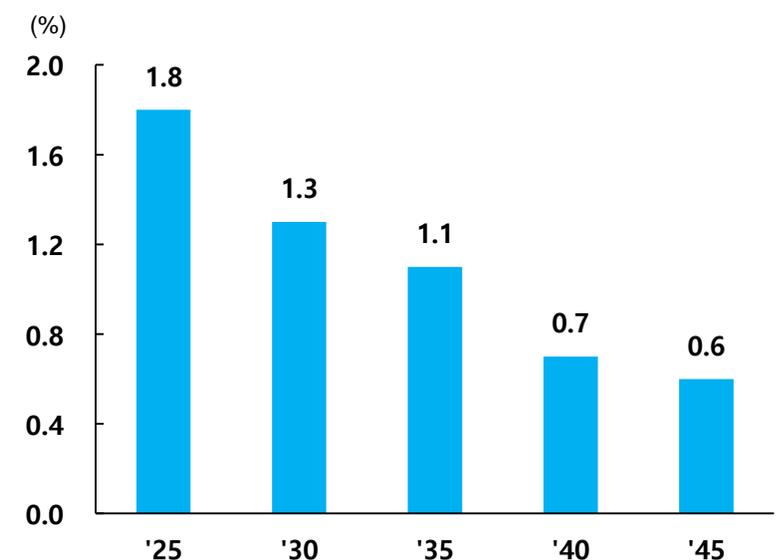
주 : 1) 소년부양인구비 = (15세 미만 인구 ÷ 15~64세 인구) × 100
 2) 노인부양인구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자료 : 국가데이터처

가계 순자산 그룹별 부동산 비중



주 : 총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 '24년 기준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



자료 : 한국은행

(현황)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간 위축되었던 민간소비도 하반기 다소 개선되며 경기 부진 완화

- 관세 회피를 위한 미국 內 선수요 확대, IT 경기 호조 장기화·글로벌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한 증가세 지속
-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금리 인하, 대규모 추경 등으로 부진했던 경제 심리가 회복 되면서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

※ 분기 성장률(전기비, %) : 0.1('24.Q3) → 0.1(Q4) → △0.2('25.Q1) → 0.7(Q2) → 1.2(Q3) / '25.3분기 부문별 성장률(전기비, %) : (민간소비) 1.3, (건설투자) △0.1, (설비투자) 2.4, (수출) 1.5

(전망) 총수출 증가세는 둔화하겠으나, 내수 개선 및 기저효과 등으로 성장률은 상승

- (상방요인) 정부지출 확대·금리 인하기조 등은 소비·투자 확대에 긍정적 요인, 글로벌 반도체 수요 지속·자동차 품목 관세 인하 등이 수출 둔화 폭 제한
- (하방요인) 관세 부과에 따른 선수요 효과 감소·품목관세 적용 확대 등이 수출 하방 압력으로 작용, 對美 현지투자 확대·수출 둔화 등은 설비투자에 부정적
- (리스크) 국내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정부 정책 추진 속도 변화 가능성,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지속, 국내 건설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물가 변동성** 확대 등

* '26.11월 예정된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급진적 정책 시행 가능성 등 / ** 폭염·폭우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및 물가 전망

(%)	'24년	'25년			'26년 ^e		
		상반기	하반기 ^e	연간 ^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2.0	0.3	1.8	1.0	2.2	1.5	1.8
민간소비	1.1	0.7	1.9	1.3	2.2	1.3	1.7
설비투자	1.7	4.5	0.8	2.6	2.8	1.3	2.0
건설투자	△ 3.3	△12.2	△5.3	△ 8.7	2.5	2.7	2.6
재화수출	6.4	1.7	4.0	2.9	2.3	0.5	1.4
재화수입	1.3	1.7	2.9	2.3	4.1	0.8	2.4
소비자물가	2.3	2.1	2.1	2.1	2.0	2.1	2.1

주 : e는 전망치,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한국은행('25.11월)

주요기관 경제성장률 전망

(%)	'25년 ^e	'26년 ^e	전망 시점
IMF	0.9	1.8	('25.10)
OECD	1.0	2.2	('25.9)
KDI	0.8	1.8	('25.11)
IB평균	0.9	1.8	('25.10)

주 : e는 전망치,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각 발표기관

(현황) 정치적 불안 해소·정부 지원 정책 확대 등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민간소비 개선

- 금리 인하 기조·물가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소비 쿠폰 지급*·국내 주식시장 호황 등이 가계 경제심리 개선 및 소비 증가 견인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7월 소매판매는 소매점과 편의점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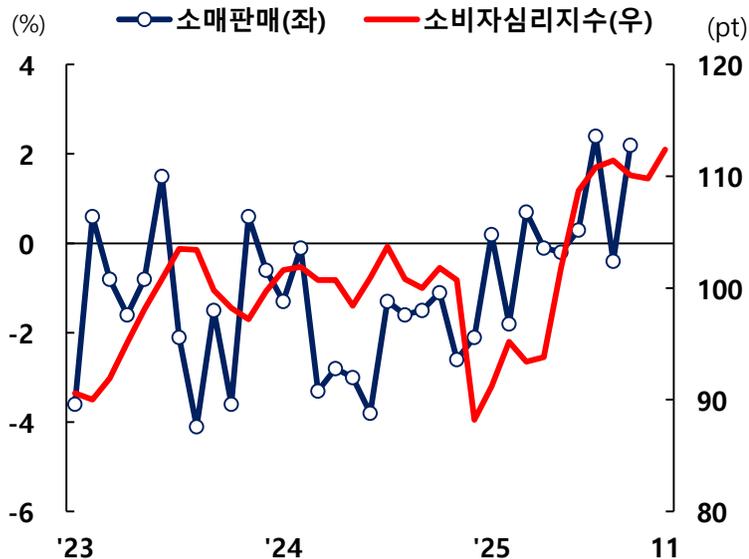
(전망)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이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및 가계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지며 민간소비 회복세 지속

- 정부와 한국은행의 완화적 정책이 소비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물가 안정에 따른 실질 소비 여력 증가도 소비 개선을 뒷받침
- 다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와 이자부담**, 정부의 대출 규제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 회복 속도는 완만할 전망

* 가계대출 잔액(조원) : 514.8('05) → 793.8('10) → 1,138.0('15) → 1,633.6('20) → 1,805.6('24) → 1,809.5('25.Q1) → 1,833.1(Q2) → 1,845.0(Q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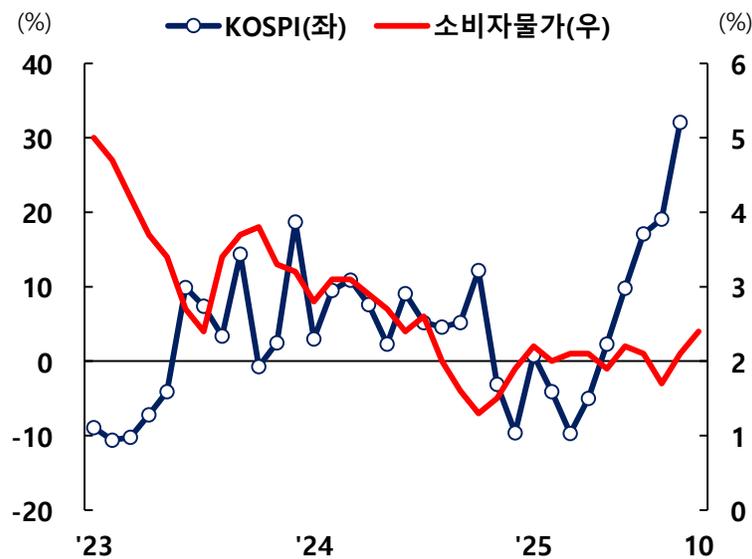
** 가계 비소비지출(전동비, %, 실질) : 1.1('23.Q3) → 2.1(Q4) → △1.7('24.Q1) → 1.0(Q2) → △1.5(Q3) → 1.2(Q4) → 2.2('25.Q1) → 2.2(Q2)

소매판매·소비자심리지수



주 : 전년 동기 대비, 소매판매는 불변지수, 심리지수 기준=100
자료 : 국가데이터처

주가·물가



주 : 전년 동기 대비, KOSPI는 월 증가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소비지출전망·대출금리



주 : 소비지출전망은 전년 동기 대비, 가계대출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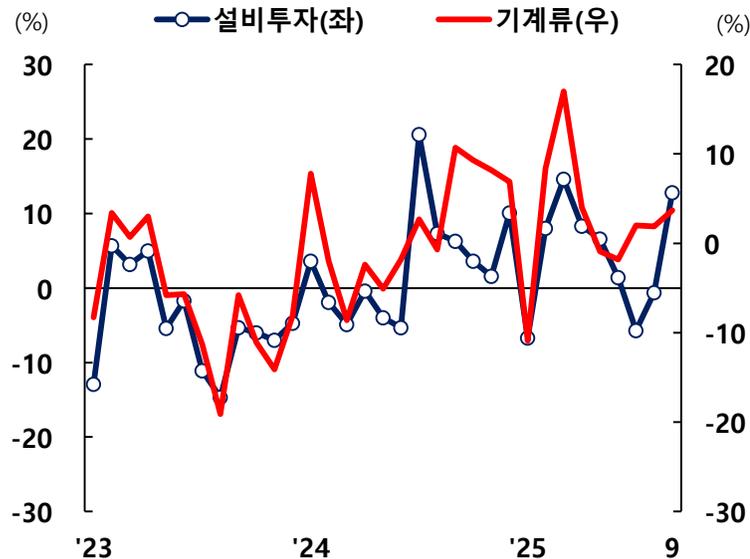
(현황)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증가, 건설투자는 부진

- **(설비투자)** 반도체 경기 호조 영향으로 기계류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도 증가
 ※ 국내 기계수주액(전동비, %, 3개월 이동평균) : 14.3('25.1) → 22.5(2) → 5.9(3) → 7.7(4) → 1.1(5) → △9.8(6) → △15.1(7) → △9.0(8) → 5.8(9)
- **(건설투자)** 착공 감소 영향 잔존, 가계대출 규제, 미분양 주택* 유지 등이 건설투자 회복 지연요인으로 작용
 * 전국 미분양주택현황(만호) : 4.8('19) → 1.9('20) → 1.8('21) → 6.8('22) → 6.2('23) → 7.0('24)

(전망) 설비투자는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소폭 둔화, 건설투자는 미약한 반등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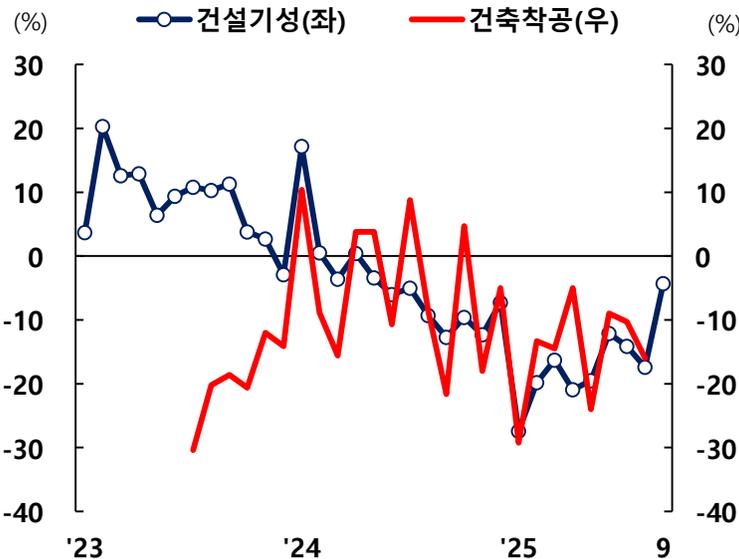
- **(설비투자)** 수출 둔화·기업의 美 현지 투자 확대* 등으로 둔화하겠으나, 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여건 개선 및 對美 협상 리스크 완화는 긍정적으로 작용
 * 韓-美 조선 협력 프로젝트 MASGA 추진으로 한화·HD현대 등 주요 조선 기업은 미국 조선소 인수 및 현대화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조성 등 미국 현지 투자 확대
- **(건설투자)**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지원*, 수주 개선 영향 가시화 등으로 건설투자는 증가 전환되나, 해소되지 않은 PF 문제 등이 증가 폭을 제한
 * '26년 정부 예산안 中 SOC 재원은 총 27.5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7.7% 증가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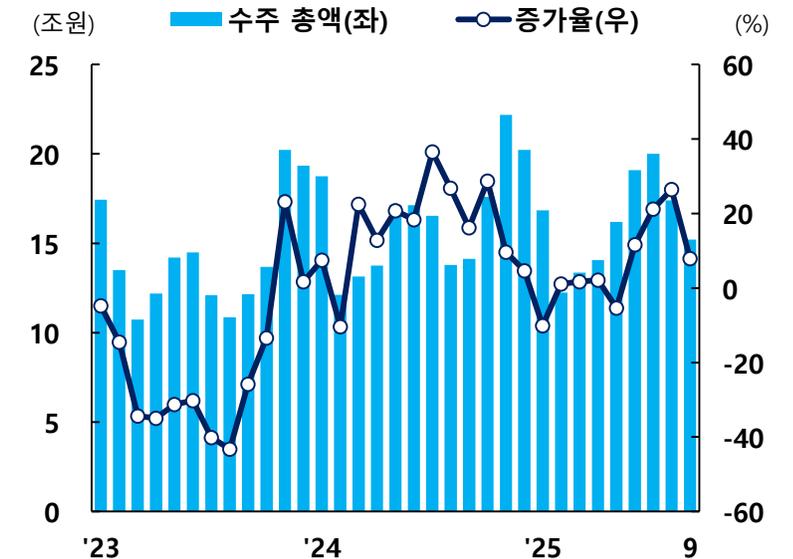
주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건설투자



주 : 전년 동기 대비, 건축착공은 동수 기준
 자료 : 국가데이터처, 국토교통부

국내 건설수주



주 : 3개월 이동평균,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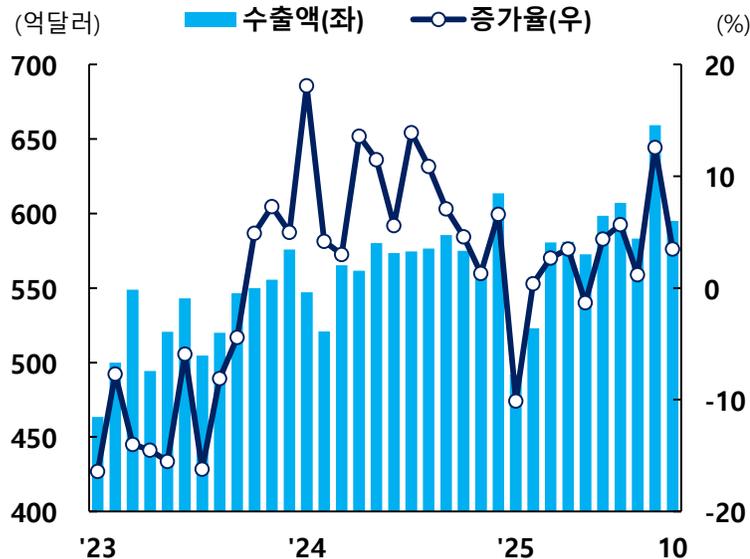
(현황) 관세 영향이 예상보다 제한적으로 작용하며 반도체·선박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흐름 유지

- 글로벌 AI 투자 확대가 유지되는 가운데 관세 적용 전 先수요 영향도 더해져 반도체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총수출 증가흐름 유지
 ※ '25.1~10월 품목별 수출 누계(전동비, %) : (반도체) 17.5, (선박) 35.0, (자동차) △0.2, (석유제품) △10.9, (자동차부품) △6.1, (무선통신) △8.9, (철강제품) △4.3
- 관세 적용으로 對美 수출이 감소하고, 對中 수출도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동남아·EU 등으로의 수출 증가가 긍정적으로 작용
 ※ '25.1~10월 국가별 수출 누계(전동비, %) : (미국) △5.0, (중국) △3.8, (EU) 3.9, (베트남) 5.9, (대만) 51.0, (싱가포르) 8.5, (CIS) 20.0

(전망) 통상환경 불확실성 잠재·품목별 관세 영향 가시화 등으로 총수출 증가 폭은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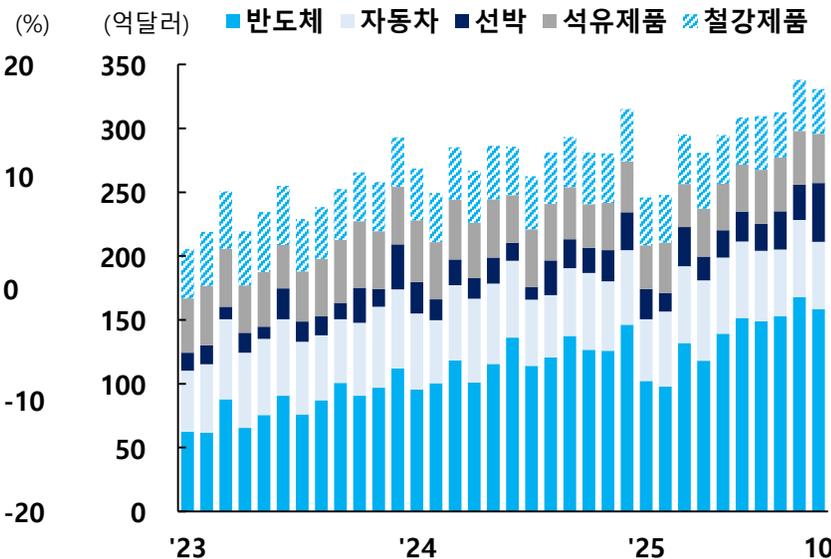
- 글로벌 경기 둔화*로 대외 수요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지속되어 총수출 위축 전망
 *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25 → '26년) : (IMF) 3.2 → 3.1, (OECD) 3.2 → 2.9, (한국은행) 3.0 → 2.9, (ECB) 3.3 → 3.1
- 수출 호조를 견인했던 품목의 先수요 효과 소멸 및 사이클 하락 전환 가능성, 품목별 관세 적용도 하방 요인
- 다만, '26년에도 AI 투자 확대 흐름 지속에 따른 반도체 수요 유지, 주요 품목의 관세 협의* 등이 수출 둔화 폭을 제한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품목관세 인하(25% → 15%), 의약품 및 반도체 관련 품목 관세 최혜국 대우 협의(APEC 한미정상회담)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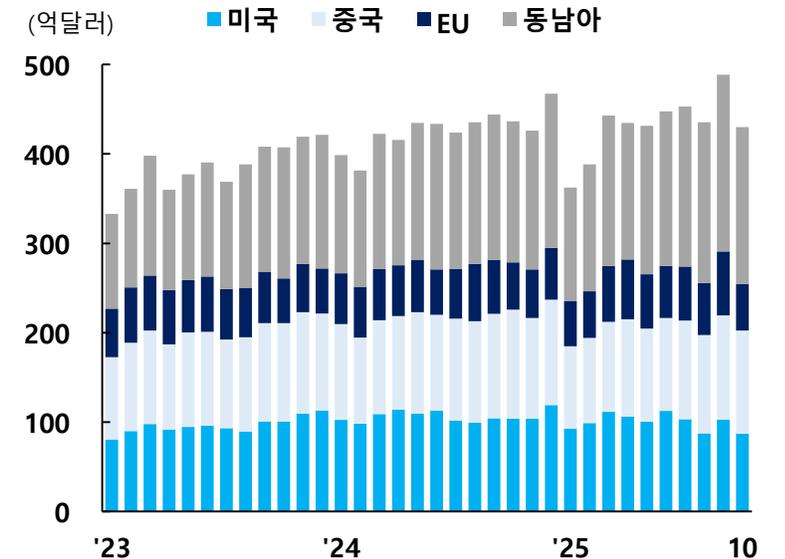
주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관세청

품목별 수출



자료 : 관세청

국가별 수출



주 : 동남아에는 베트남·홍콩·싱가포르·대만 포함
 자료 : 관세청

□ 국내경제 [정부지출]

(현황)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발행·페이백 등 적극적 지원정책 시행으로 경기 부양 도모

- 통상환경 변화 및 산불·폭우 등의 재난 피해, 민생 회복 등의 현안 대응을 위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 1차 예산 총액 13.8조원(재난 대응 3.3조원, 통상 및 AI 지원 4.5조원, 민생 지원 5.1조원 등) / 2차 예산 총액 31.8조원(경기 진작 17.3조원, 민생 안정 5.3조원 등)

(전망) 경기 진작 및 회복에 중점을 둔 예산안 편성으로 성장의 정부 기여도 확대 기대

- 정책의 기본 방향은 건전재정보다는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에 초점
- AI(10.1조원) 및 신산업·R&D 혁신*(44.3조원), 저출생·고령화 대응**(70.4조원), 국민안전 및 외교·안보 강화(30조원) 등에 중점투자 계획

*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첨단산업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투자로 R&D 성과 가시화 촉진 등

** 아동수당 연령 상향 및 추가 지원, 아이돌봄 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확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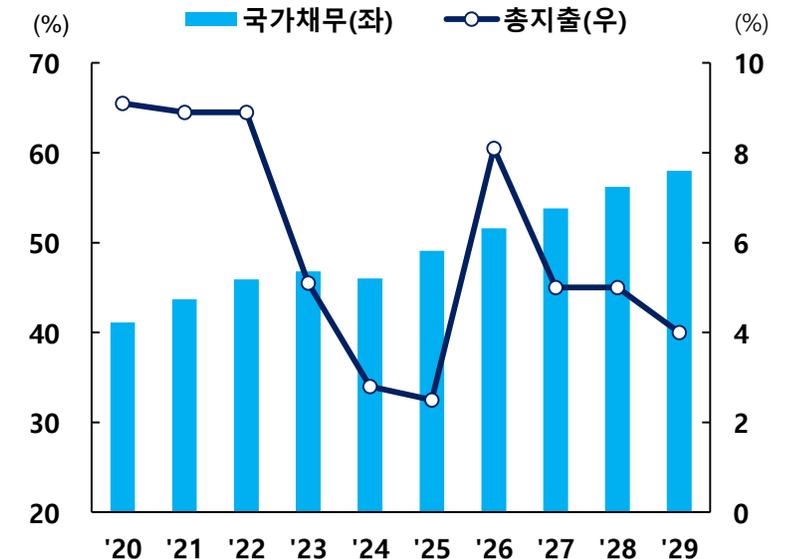
- 총지출 증가율은 '25~'29년간 연평균 5.5% 수준, '26년은 경제성장 및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 증가율 대폭 상향 이후 '27년부터 점진적 축소 계획

정부예산안 지출부문

(조원)	'24년 본예산(A)	'25년 예산안(B)	증감 (B-A)	'24-'25년 증가율	'25년 본예산(C)	'26년 예산안(D)	증감 (D-C)	'25-'26년 증가율
전체	656.6	677.4	+20.8	3.2%	673.3	728.0	+54.7	8.1%
보건·복지·고용	237.6	249.0	+11.4	4.8%	248.7	269.1	+20.4	8.2%
교육	95.2	98.5	+3.3	3.5%	98.5	99.8	+1.4	1.4%
문화·체육·관광	8.7	8.8	+0.1	1.3%	8.8	9.6	+0.8	8.8%
환경	12.5	13.0	+0.5	4.0%	13.0	14.0	+1.0	7.7%
R&D	26.5	29.7	+3.2	11.8%	29.6	35.3	+5.7	19.3%
산업중기에너지	28.0	28.3	+0.3	1.1%	28.2	32.3	+4.1	14.7%
SOC	26.4	25.5	△0.9	△3.6%	25.4	27.5	+2.0	7.9%
일반·지방행정	110.5	111.3	+0.8	0.6%	110.7	121.1	+8.6	9.4%
기타	116.7	120.4	+3.7	3.2%	119.8	128.4	+10.4	7.2%

주 : 기타는 농림·수산·식품,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등
자료 : 기획재정부

정부 총지출 증가율



주 : 국가채무는 GDP대비, 총지출은 전년 대비,
본예산·'25년은 추경 기준, '25년 이후는 계획
자료 : 기획재정부

□ 국내경제 [기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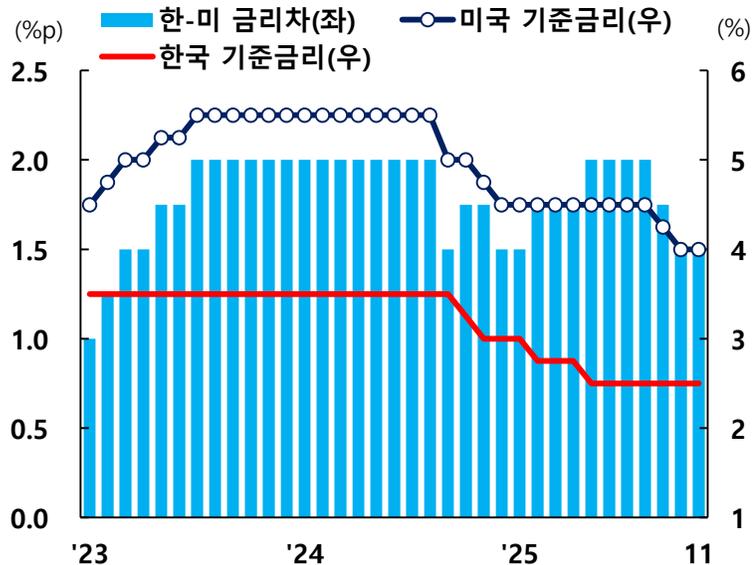
(현황)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국내 경기 하방 압력 확대 등으로 상반기 2회(50bp) 인하

- 물가는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통상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 둔화도 예상됨에 따라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하방 압력 완화 필요성 확대
- 금리 인하 기조는 지속하고 있으나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대출 우려 잔존 등으로 5월 인하 이후 동결

(전망) 성장 하방 리스크에도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연 1회 인하(2.25%)에 그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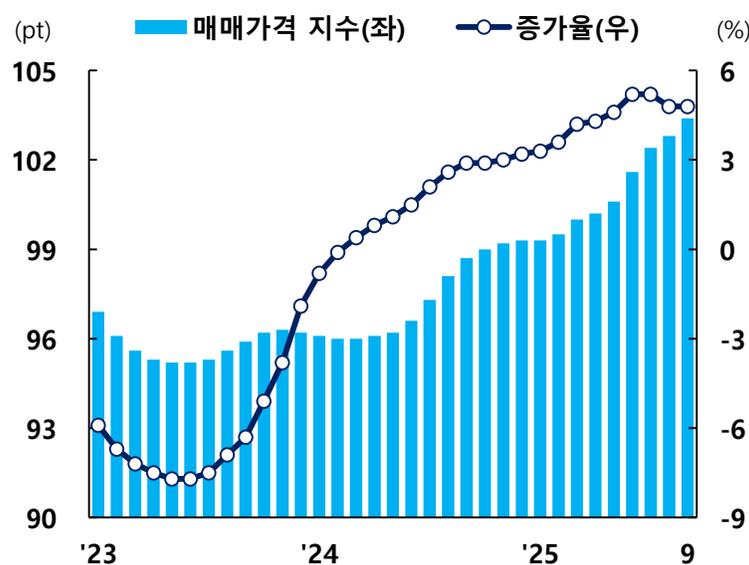
- 고환율 지속 및 이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 확대, 부동산 규제 정책 효과 지연 등으로 적극적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
 - ※ 이창용 한은 총재,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를 경우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의 부작용이 더 클 것" 우려 ('25.8월 금통위 간담회)
- 다만, 美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에 따른 인하 여력 확대, 국내 경제의 성장 하방 위험 잠재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지속
 - * 연준 위원들은 '26년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3.4%로 전망('25.9월 SEP), 시장의 '26년말 기준금리 예상치는 2.75-3.00%('25.11.26일 기준, CME Fedwatch)

기준금리



주 : 미국은 상단기준
자료 : Fed, 한국은행

서울 주택 매매가격



주 : 전년 동기 대비, 지수는 '25.3=100,
자료 : 한국부동산원

주요 IB 기준금리 전망

(%)	'25년 ^e	'26년 ^e	
		6월	12월
Goldman Sachs	2.25	2.25	2.25
BNP Paribas	2.25	2.25	2.25
S&P Global	2.25	2.25	2.25
ING Group	2.25	2.25	2.00
Morgan Stanley	2.25	2.00	2.00
Barclays	2.25	2.00	2.00
Standard Chartered	2.25	2.00	2.00
JP Morgan Chase	2.25	2.00	1.75

주 : 전망 시점은 '25.10월
자료 : 블룸버그

□ 국내경제 [환율]

(현황) 연중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연평균 1,410원대의 높은 수준 기록

- 국내정치불안, 美 관세 불확실성 확대로 4월 1,482원까지 높아진 환율은 이후 韓 대선, 관세 협상이 진행되며 1,300원 후반대로 하락
- 10월 이후 美 섯다운 장기화, AI 버블 경계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및 對美투자펀드 관련 우려가 지속되며 1,400원 중반대 高 환율 지속

(전망) 美 금리인하로 연중 점진적 하락 예상되나 달러 실수요가 하락폭을 제한, 연중 1,400원 내외 등락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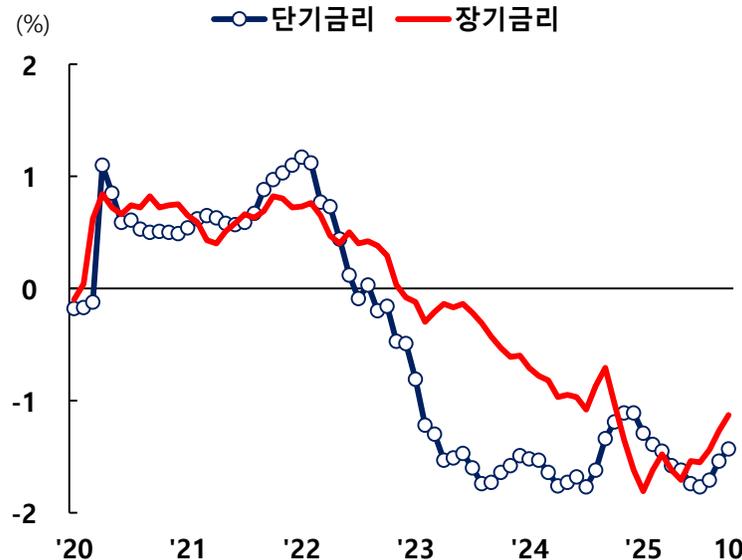
- 美 금리인하 본격화에 따른 달러 약세 및 WGBI 지수 편입('26.4)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채권시장 유입* 으로 원/달러 환율은 점차 하락할 전망
 - * 한국 편입비중(2.22%) 감안, WGBI 추종자금(약 2.5조달러 추정) 中 약 560억불 규모 국내자금 유입 전망(기획재정부)
 - 단, 美-中 무역갈등, 프랑스 정치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對美수출 둔화도 원화가치 하락요인으로 작용
 - 내국인의 해외 주식투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외국인의 국내증시 순매수 지속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
- ※ 국내 개인 미국주식투자 잔액 변화(억달러, 전기비) : 65.2('25.6) → 50.9(7) → 26.8(8) → 21.9(9) → 14.5(10)

원/달러 환율·달러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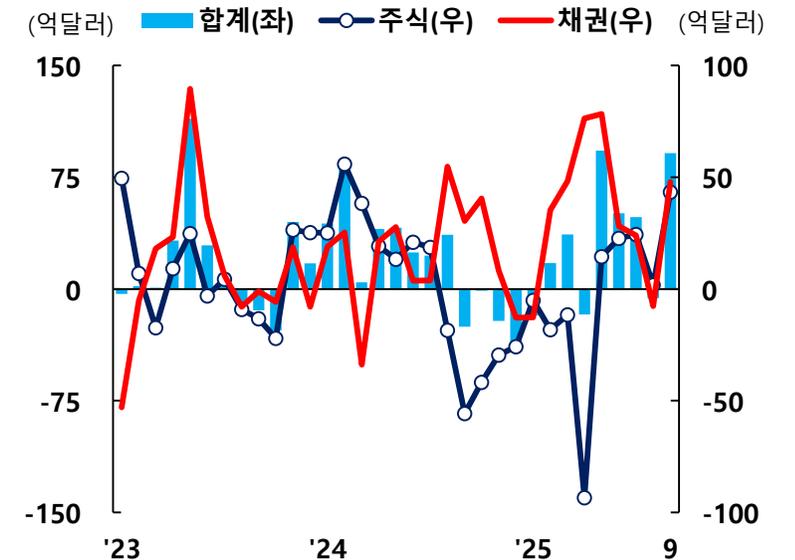
주 : 달러인덱스는 1973.3=100, 환율은 증가기준
자료 : NYSE, 한국은행

韓·美 금리차



주 : 단기금리는 3개월 CD금리, 장기금리는 10년 만기 국채금리
자료 : 한국은행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증감



주 : 기간 중 증감
자료 : 한국은행

2. 산업환경

□ 산업환경 [종합]

(현황) 제조·서비스업의 전반적 부진 下, 반도체·조선·운수창고·도소매를 중심으로 하반기 생산은 일부 회복세

- (제조업) 반도체와 조선이 전체 생산을 견인하고 자동차의 수출도 증가추세이나 철강·이차전지·석유화학 등 산업은 업황이 부진한 상황
 - (서비스업) 운수·창고의 생산증가와 함께, 내수경기에 민감한 도·소매의 생산도 최근 반등하며 하반기 서비스업의 생산은 일부 회복 조짐
- ※ 운수·창고 생산지수(전동비, %, 국가데이터처) : 3.5('25.1) → 4.3(3) → 4.1(5) → 2.3(7) → 6.6(9) / 도·소매 생산지수(전동비, %, 국가데이터처) : △5.6('25.1) → 0.9(3) → △1.5(5) → 5.8(7) → 12.5(9)

(전망) 반도체·조선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생산증가와 서비스업의 회복세로 전체 생산은 다소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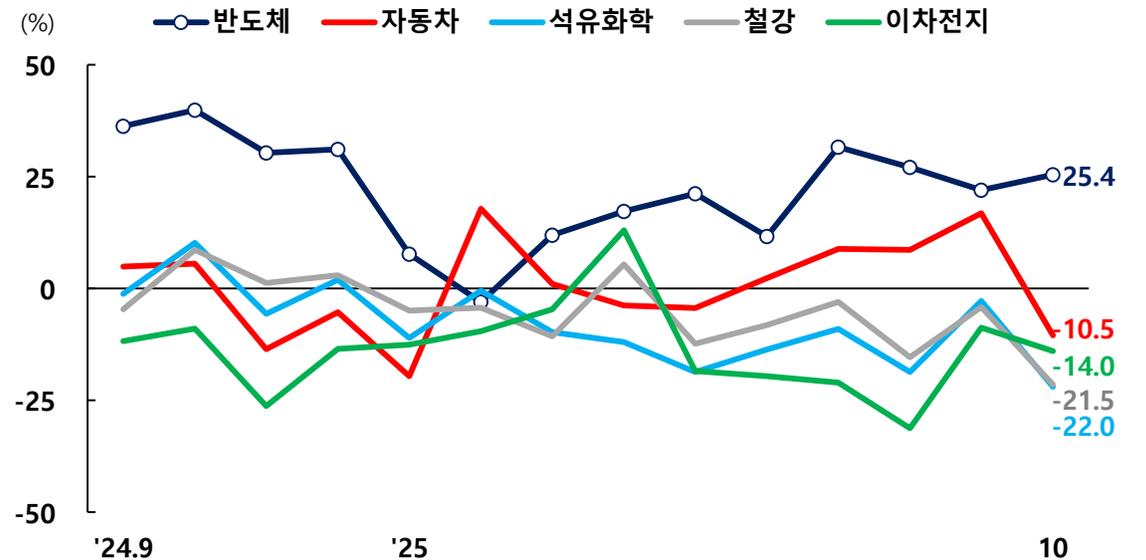
- (제조업)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의 약세에도 세계 AI 소비 확대·韓-美조선 협력 본격화에 따른 반도체·조선의 선전으로 전체 제조 생산은 증가 전망
 - (서비스업) 운수·창고, 정보·통신의 완만한 성장과 내수 회복 기대 등으로 전체 서비스업은 일부 개선 예상되나, 부동산업 부진은 지속될 전망
- ※ 정보·통신 생산지수(전동비, %, 국가데이터처) : 2.2('25.1) → 0.8(3) → 2.0(5) → 0.7(7) → 8.2(9) / 부동산 생산지수(전동비, %, 국가데이터처) : △1.5('25.1) → △1.7(3) → △2.6(5) → △2.6(7) → 0.1(9)

국내 산업별 생산지수 증가율

(%)	'22년	'23년	'24년	'25년			전망
				Q1	Q2	Q3	
총 산업	4.8	1.2	1.5	△0.5	0.3	2.8	▲
제조업	1.0	△2.6	4.2	2.0	2.2	6.0	▲
반도체	5.4	△2.0	20.2	15.9	18.3	21.8	▲
자동차	9.3	10.4	△2.0	0.6	△0.6	7.5	▬
석유화학	△8.0	△3.0	2.4	△2.2	△3.4	△1.7	▼
철강	△8.5	2.5	△2.9	△8.0	0.5	0.1	▼
조선	21.0	2.3	17.0	34.6	41.7	31.7	▲
이차전지	17.4	△7.9	△27.8	△12.2	△5.4	△5.8	▼
서비스업	7.0	3.4	1.1	0.4	1.4	3.1	▲

주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국가데이터처

국내 산업별 수출액 증가율



주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산업통상부

□ 산업환경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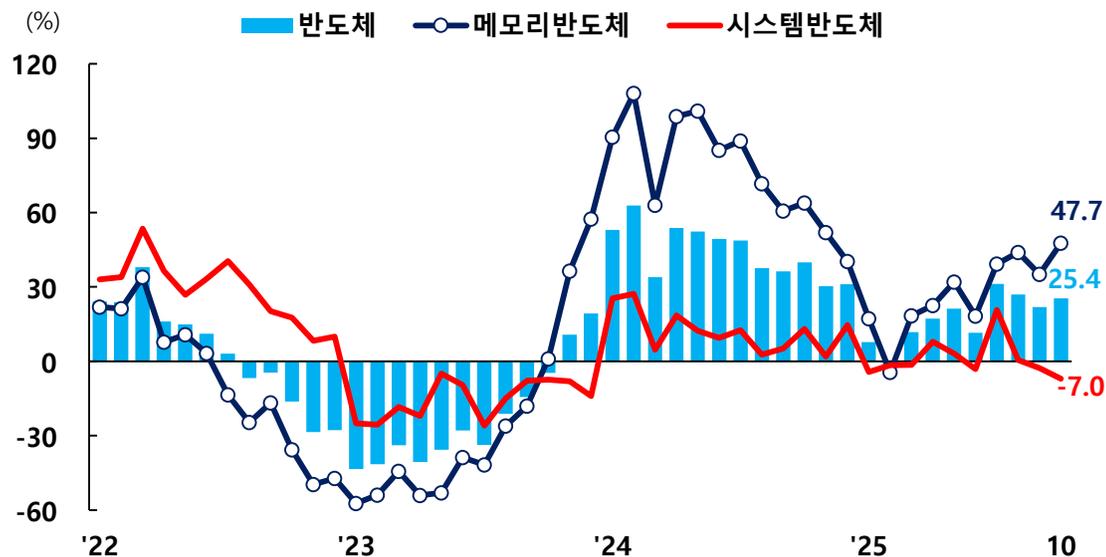
(현황) AI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는 지속되고 있으나, 對中 수출감소로 증가 폭은 전년대비 다소 축소

-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등 AI 칩 수요 확대가 글로벌 반도체 성장을 견인하며 세계 매출은 증가세
 - 특히, 견조한 AI 수요로 반도체 수출은 '23.10월('25.2월 제외) 이후 상승세 지속되나 對中 수출 감소,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폭은 둔화
- ※ 반도체 對中 수출(전동비, %, 산업통상부) : △16.8('25.3) → △7.1(5) → △2.0(7) → 6.1(9) → 1.9(10) / 미국 반도체 매출(전동비, %, WSTS) : 44.0('25.3) → 24.1(5) → 43.9(7) → 35.5(9)

(전망) AI 소비 확대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며, 국내 반도체 생산과 수출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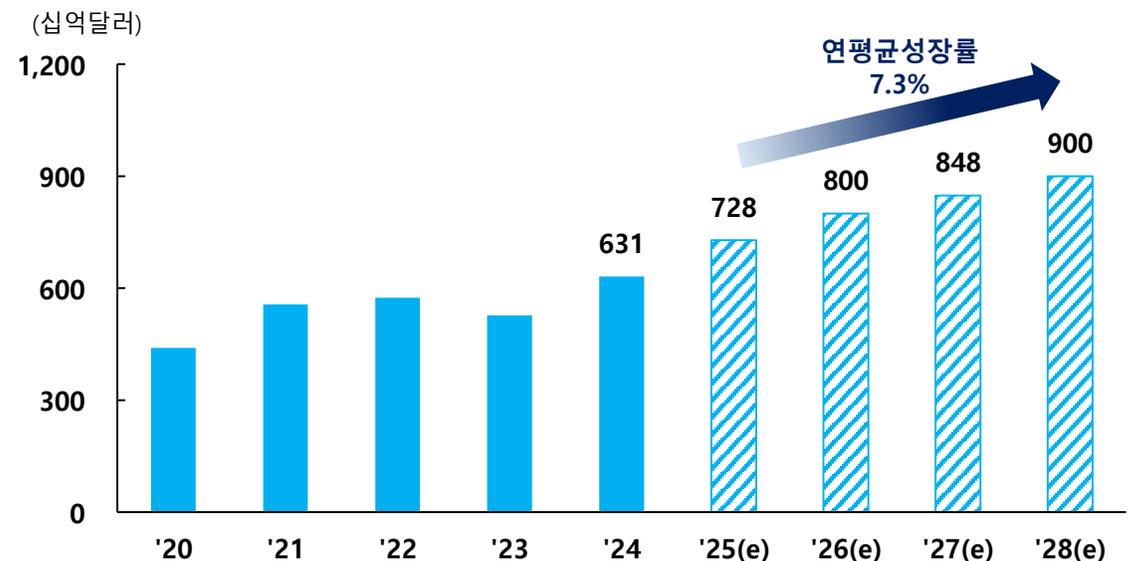
- 생성형 AI 모형, AI 최적화 인프라,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AI 처리 반도체 등의 글로벌 소비가 확대되며 세계 매출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 ※ 모건스탠리는 지난 4월 비관적 전망과 달리 AI의 강력한 수요가 메모리 분야를 슈퍼사이클로 이끌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도 낙관적 전망을 제시
 ※ APEC 이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구축 핵심파트너로서 HBM4를 공급할 계획으로 내년 실적도 긍정적 전망
- 다만, 미국의 관세 및 수출통제 영향, 중국의 DRAM 및 NAND 양산기술 추격으로 인한 경쟁심화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 ※ 글로벌 AI 소비 전망(전동비, %, Gartner) : 49.6('25e) → 36.7('26e) / D램 가격 추이(달러, 산업통상부) : 2.1('25.5) → 2.6(6) → 3.9(7) → 5.7(8) → 6.3(9) → 7.0(10)

반도체 수출



주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주 : e는 예상치, 매출액 기준
 자료 : WSTS(세계 반도체시장 통계기관)

(현황) 글로벌 친환경차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와 국내 내수 판매 호조로 자동차 생산 증가세

-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對美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 외 지역 수출의 확대로 최근 자동차 산업 수출 증가 지속*
 - ※ 지역별 자동차 수출액(전동비, '25.10 누적기준, %, 산업통상부) : (미국) △15.9, (EU) 21.7, (아시아) 39.1, (중남미) 11.6 / * 완성차 업체 조업일수 감소로 10월 수출 일시 감소
- 국내 하이브리드 수요 확대에 따른 친환경차 판매 증가와 전년도 내수 부진에 따른 기저 효과로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
 - ※ 친환경차 내수 판매량(전동비, %, 산업통상부) : 13.3('24.12) → 13.6('25.3) → 36.1(6) → 40.5(9)
 - ※ 자동차 내수 판매량(전동비, %, 산업통상부) : △0.6('24.12) → 2.4('25.3) → 5.8(6) → 20.8(9)

(전망) 관세 불확실성 해소는 긍정적이거나, 美 전기차 수요 둔화 및 EU 글로벌 경쟁 심화는 잠재된 리스크

- 韓-美 무역 협상 타결로 국내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 시장 내 韓 완성차 기업의 경쟁력은 유지되고 수익성 감소 폭은 축소될 것으로 기대
- 다만, 美 자동차 구매 심리 위축 및 세제 혜택 종료('25.9)에 따른 전기차 수요 둔화로 對美 자동차 수출 규모는 지속 감소 예상
 - ※ 美 자동차 구매지수(100=보통, 미시간대) : 64('24.12) → 58('25.3) → 50(6) → 52(9) / 對美 자동차 수출액(전동비, %, 산업통상부) : △4.6('25.7) → △15.2(8) → △10.7(9) → △29.0(10)
- 친환경차를 주력으로 하는 中 기업이 급성장하며 전통 완성차 기업들을 위협, 중국 과잉생산 물량의 수출 확대로 EU시장 內 경쟁 심화 전망

자동차 수출액 및 생산지수 증가율



주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산업통상부, 산업연구원 ISTANS

글로벌 업체별 자동차 판매량

(천대, %)	'22	'23	'24	'25.9	증감률	
					'24	'25.1~9
토요타 (日)	9,891	10,565	10,093	7,666	△4.4	3.5
폭스바겐 (獨)	7,925	8,723	8,577	6,314	△1.6	1.8
현대·기아 (韓)	6,494	6,876	6,879	5,275	0.0	2.8
GM (美)	6,055	6,058	5,517	4,426	△8.9	15.8
스텔란티스 (蘭)	5,701	5,986	5,500	3,995	△8.1	△3.6
BYD (中)	1,890	3,136	4,523	3,665	44.2	25.8
Geely (中)	2,255	2,789	3,471	3,126	24.5	28.4

주 : 누계기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자동차연구원, 한국신용평가, MarkLi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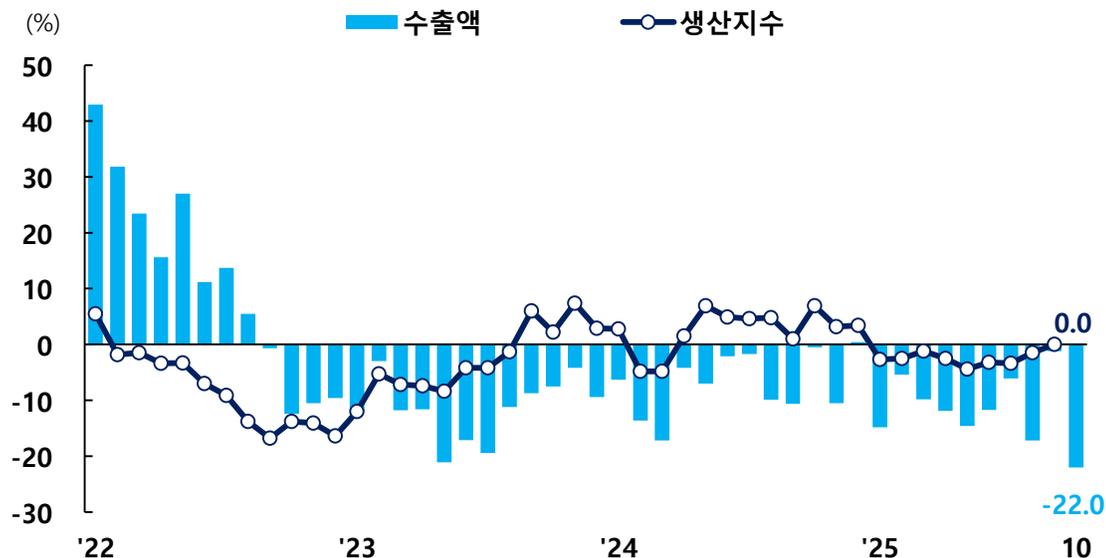
(현황)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와 원가 경쟁력 약화 등으로 침체 장기화

- 중국과 중동 산유국들의 생산설비 증설에 의한 공급과잉, NCC공정의 가격경쟁력 약화, 저부가가치 범용제품 위주 생산으로 업황 부진 지속
-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자급률 상승으로 국내 수출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주요 석유화학기업의 영업이익은 2년 연속('23~'24) 손실 기록
 - ※ 국내 석유화학제품 국가별 수출 비중('25.9월 누계기준, %, 한국무역협회) : (中) 38.4, (인도) 7.3, (美) 6.8, (베트남) 6.1, (튀르키예) 5.0, (日) 3.9, (인나) 2.6, (태국) 2.4, (대만) 2.4, (이탈리아) 1.7
- 정부는 선제적 위기 대응과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여수시와 서산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종합 지원 제공 中

(전망) 수년간 이어진 적자 폭 개선이 예상되나,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업황 부진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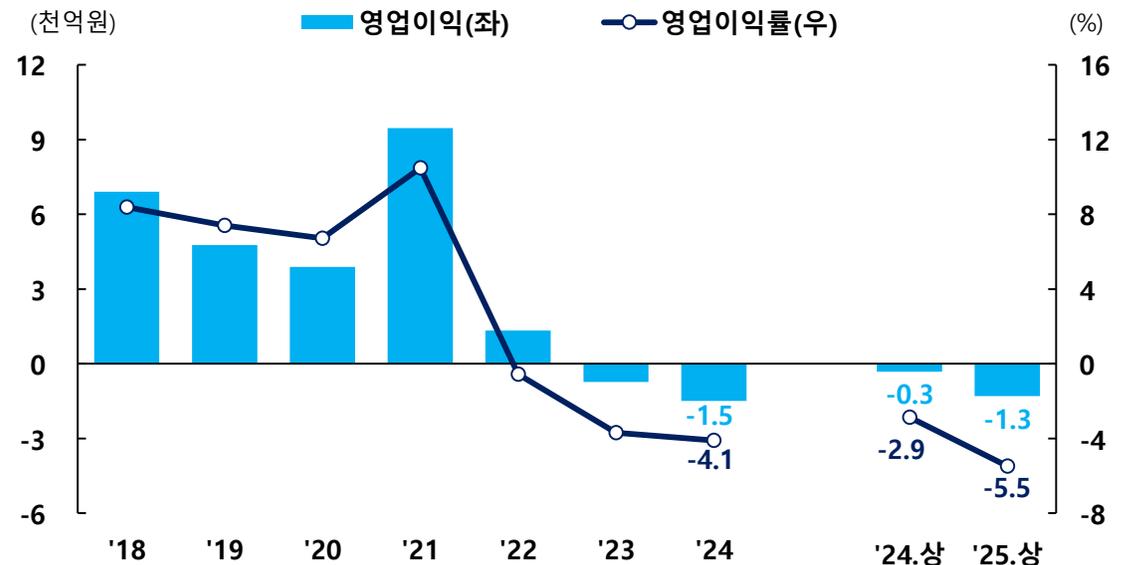
- 핵심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손익분기점 250달러 수준)'가 회복되며 적자 폭이 줄고, 수익성은 바닥 수준에서 벗어나 개선될 것으로 기대
 - ※ 에틸렌 스프레드 추이(달러/Ton, 산업통상부) : 174.4('25.5) → 174.1(6) → 200.9(7) → 205.4(8) → 196.5(9)
- 정부 구조조정안에 따른 노후 NCC 설비 감축과 공급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의 단기간 해소는 어려운 상황으로 업황 부진 지속 예상
 - ※ 정부는 '25.8월 석유화학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과잉설비 감축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 현재 기업 자구안 마련 中

석유화학 수출액 및 생산지수 증가율



주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산업통상부, 산업연구원 ISTANS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평균 영업실적



주 : '24.상, '25.상 DL케미칼 반기실적 미공시
자료 : DART, 한국무역협회, 롯데케미칼 외 9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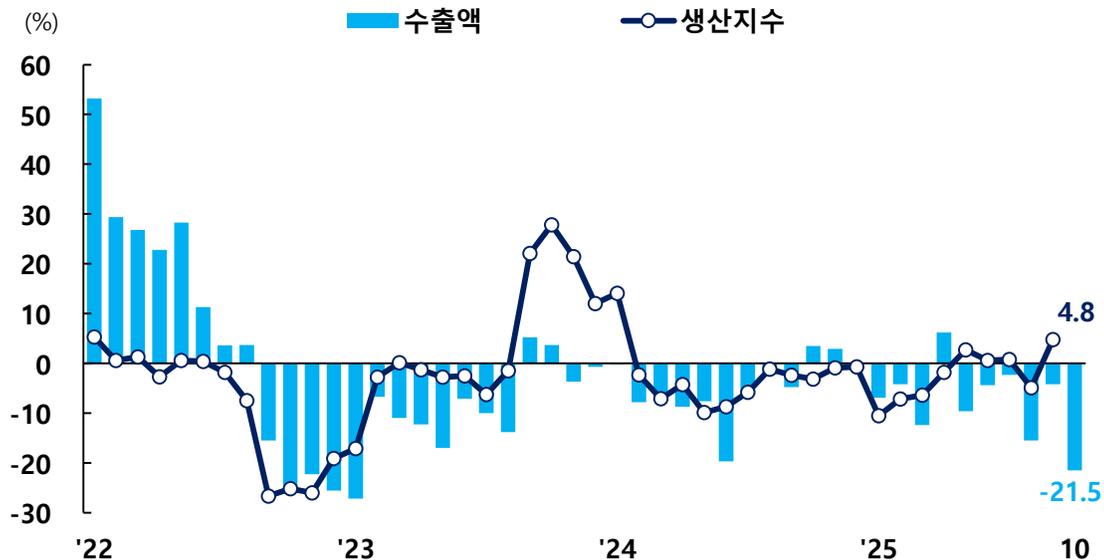
(현황) 전세계적 공급 과잉, 내수 부진, 보호무역 강화의 삼중고로 철강 산업의 구조적 위기 심화

- 중국의 철강 소비 감소와 수출 확대 기조가 글로벌 수급 불균형을 악화시켜 국내 철강 생태계 위기 심화
 - ※ 연간 세계 조강 생산량과 명목소비량 차이(백만톤, World Steel) : 92.6('20) → 119.9('21) → 110.7('22) → 125.9('23) → 142.6('24)
- 국내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내수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美 보호무역 기조 강화에 따른 관세 인상 조치로 수출 감소도 심화
 - ※ 국내 철강재 명목소비(전동비, %, 산업통상자원부·포스코경영연구원) : △8.4('22) → 2.1('23) → △10.1('24) → △2.1('25^e)
 - ※ 對美 철강재 수출 추이(전동비, %, 한국철강협회·철강재계 기준) : 13.6('25.6) → △21.6(7) → △28.7(8), '25.6월 철강 50% 관세 부과後 7월부터 급감
- 철강 산업 부진이 지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지며, 정부는 포항시·광양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전망) 국내·외 공급과잉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강 수요 부진과 EU 보호무역 강화로 업황 부진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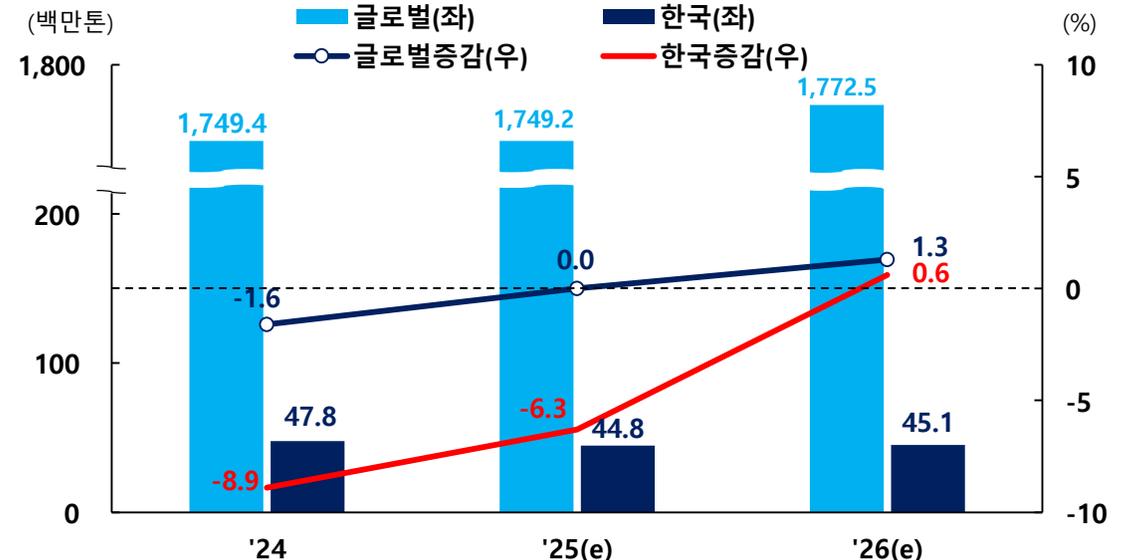
- 中 철강업종 안정성장 정책*과 韓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등이 시행될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 상황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
 - * 향후 2년간 철강산업 성장률 연평균 4% 설정, 신규 생산능력 엄격 금지 등 / ** 설비조정, 통상대응, 고부가·저탄소 전환으로 수급조절하고 내수시장 및 경쟁력 강화
- 다만, 글로벌 철강 수요 부진 및 EU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제도 도입('26.7월) 등의 여파로 업황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 수입 철강 제품 무관세 쿼터 총량을 기존 대비 47% 축소, 쿼터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율 25%에서 50%로 상향 등

철강 수출액 및 생산지수 증가율



주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산업통상부, 산업연구원 ISTANS

글로벌 철강 수요 전망



주 : 전년 대비, e는 전망치
자료 : Worldsteel Short Range Outlook

(현황) LNG선 등 既수주 선박의 인도물량 확대로 생산과 수출은 증가세 지속되나, 신규 선박 수주는 부진

- '22~'23년 높은 선가로 수주한 선박(LNG-LPG 등)이 본격적으로 인도되면서 수출액과 생산은 모두 증가세를 유지
 - ※ '25년도 조선 3사(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선종별 인도 비중(%) : (LNG) 50.2, (컨테이너) 34.2, (LPG) 8.8, (탱커) 3.8
- 다만, 세계 경기 둔화와 해운시황 부진으로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감소하며, 국내 상반기 신조선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
 - ※ '25년 상반기 글로벌 선박 발주(전동비, %, Clarkson research) : △54.5 / '25년 상반기 국내 선박 수주(전동비, %, Clarkson research) : △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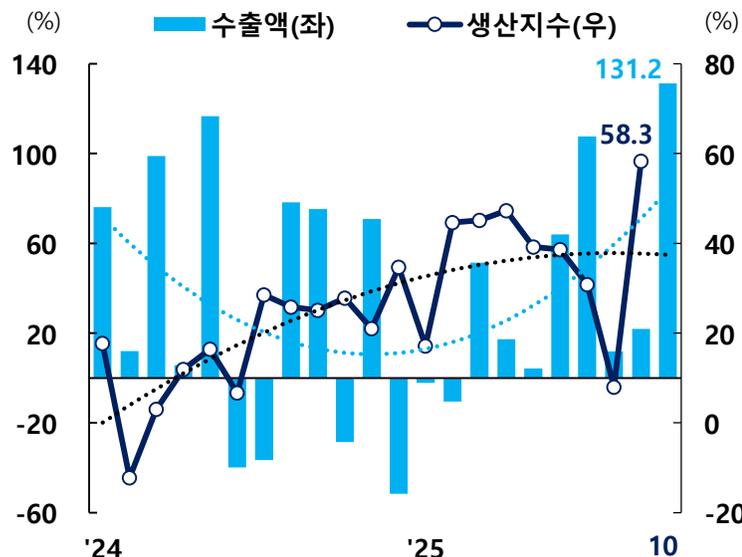
(전망) 글로벌 선박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既수주 선박 인도가 지속되며 생산과 수출은 증가세 유지 전망

- 선박 공급과잉으로 글로벌 발주는 작년 10월 대비 38% 감소, 국내 업체의 수주 잔량도 9.2% 감소하며 하락 추세가 지속될 전망
- 다만, LNG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既수주 선박 인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생산과 수출은 증가세 유지 예상
- 호주·미국 등 LNG 개발 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른 수주 기대 및 APEC 이후 보다 구체화된 韓-美 조선 협력**은 국내 기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26년 글로벌 LNG선 발주 프로젝트 예상규모 : 16~20척(우드사이드에너지, 호주), 20척(샘프라에너지, 미국) 등 총 70척 수준, '25년 글로벌 LNG발주(총18척) 대비 약 390%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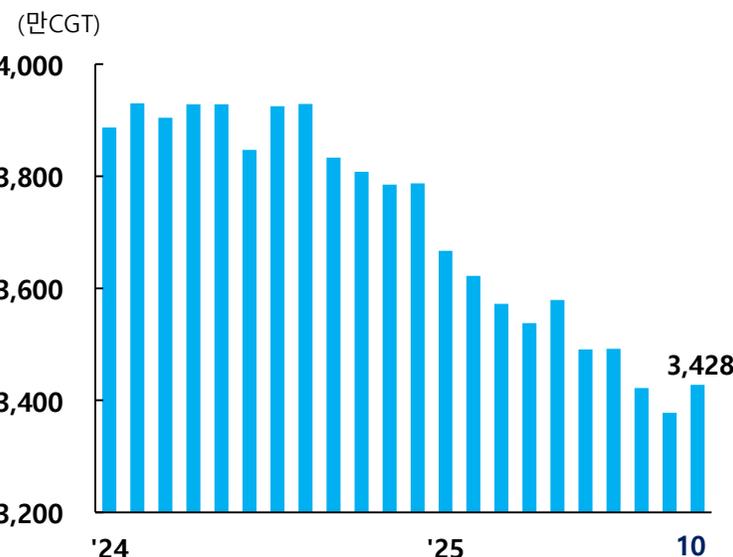
** 무역협상('25.10) 이후 HD현대는 50억 달러 투자프로그램 추진, 삼성중공업은 해군 MRO-국적선 건조 추진, 한화오션은 필리 조선소에 50억 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조선 수출액 및 생산지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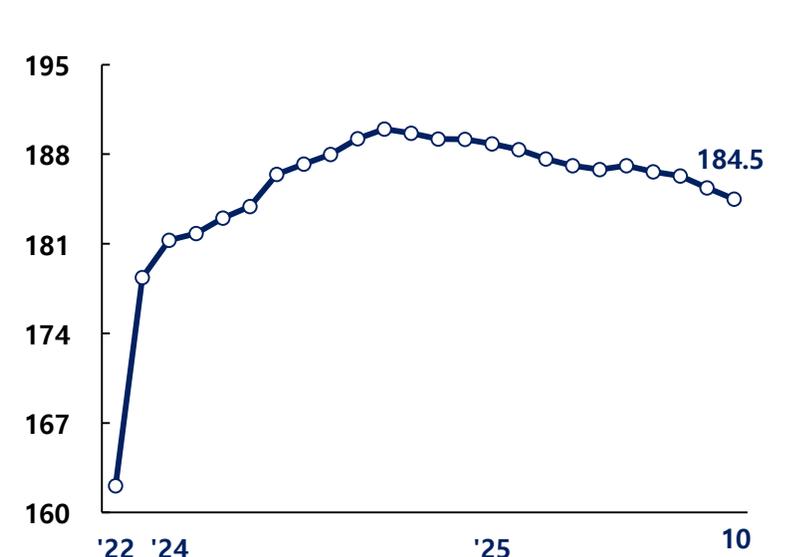
주 : 전년 동기 대비, 점선은 추세선
자료 : 산업통상부, 국가데이터처

국내 선박 수주잔량



주 : CGT는 표준화물선환산톤수
자료 : Clarkson research

신규건조 선박가격 지수



주 : 1988=100
자료 : Clarkson research(Clarkeon New Building Price Index)

□ 산업환경 [이차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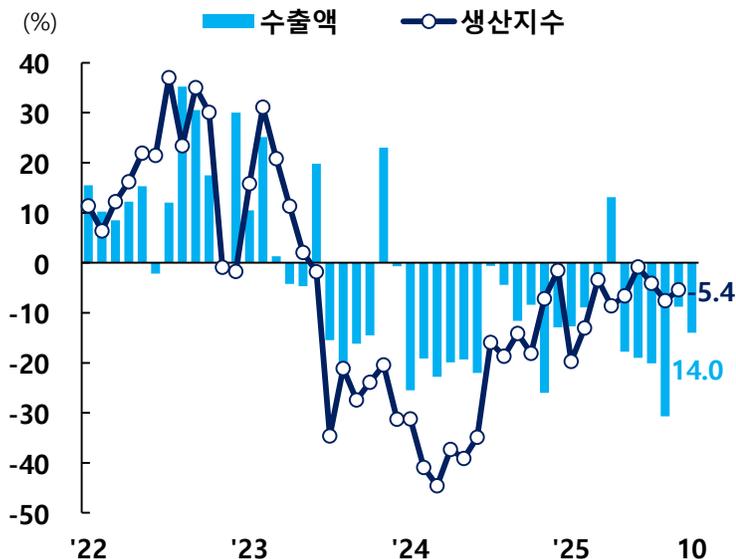
(현황) 韓-中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와 美 전기차 수요 둔화로 생산 및 수출 부진 지속

- 중국 자체 공급망을 통한 대규모 생산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배터리 점유율 확대, 최근 韓-中 글로벌(중국시장 제외) 배터리 점유율 역전
※ 중국지역 제외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22→'25.상, %): (중국) 26 → 39, (한국) 54 → 38
- 최근 경기 회복으로 EU 전기차 판매량은 회복세를 보인 반면, 전기차 가격 부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미국 전기차 판매는 부진
※ 美 소비자 전기차 구매 의향 비율(%, 미국자동차협회): 25('22) → 16('25)

(전망) 中 과잉생산, 美 수요둔화로 단기간 업황 회복은 어려우나, 對中 견제로 인한 반사이익 가능성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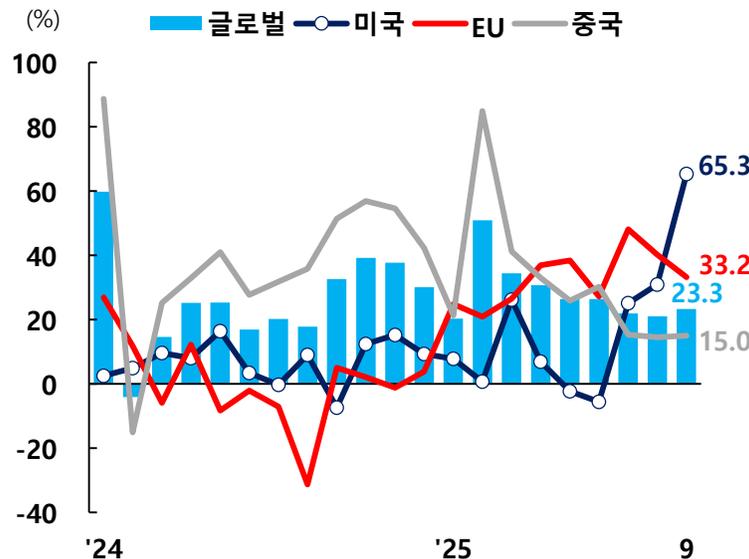
- 중국 이차전지 셀 설비는 중국 내수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시장 적극 공략 예상
- 트럼프 정부의 전기차 관련 지원 정책 조기 종료*에 따라,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당분간 둔화될 것으로 전망
*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32년까지 최대 7,500달러), 중고 전기차 보조금(최대 4,000달러) 등 전기차 지원 정책 조기 종료('25.9)
- 다만, 미국의 中 제품 규제 강화와 데이터센터 증설로 인한 ESS 배터리 수요 증가는 美 현지생산 기반을 갖춘 韓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
※ 미국 시장 내 PFE(중국 등 우려 국가 소속의 금지외국기관) 원산지 규제 '26년부터 도입

이차전지 수출액·생산지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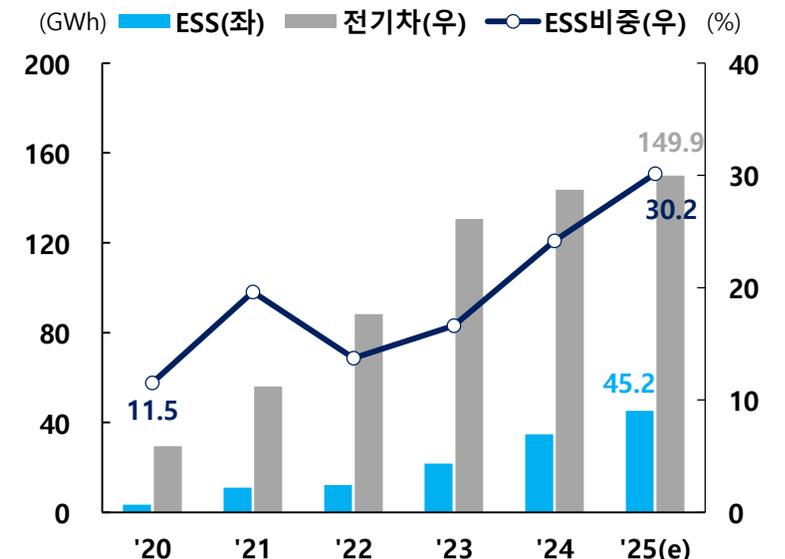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산업통상부, 산업연구원 ISTANS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자료: SNE Research, IBK투자증권

美 ESS 배터리 수요 및 비중



주: ESS비중은 전기차 대비 ESS 기준
 자료: 삼성증권

□ [이슈] 2026년 주요 산업 키워드 : ① AI(인공지능)

한국은 AI 주권 국가의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 '26년은 AI 팩토리 등 피지컬 AI 실증 노력 본격화 전망

- 젠슨 황은 APEC 2025에서 “韓은 SW·제조 역량을 모두 보유, AI 분야 리더가 될 가능성이 무한대”라고 평가, 최신 GPU 26만장 공급 계획 발표
 - ※ 삼성, SK, 현대차 등은 엔비디아로부터 공급 받는 GPU를 활용하여 AI 팩토리 구축 등 AI 기술 상용화 추진, 정부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AI 컴퓨팅 센터 구축 등에 활용할 예정
- 국내 주요기업 주도로 대규모 AI 실증 사업이 구체화, AI 팩토리·로봇·자율주행 등 제조업 혁신이 본격화되며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

정부와 국내외 기업 주도로 AI 생태계(AI 반도체·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와 AI 관련 인프라 구축 확대 예상

- AI 데이터센터·전력망 등 부문에 국민성장펀드 및 블랙록(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등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며 AI 인프라 확산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
 - ※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중 AI 분야 30조, 인프라에 10조,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10조원 이상 지원 예정이며 블랙록은 국내 AI·재생에너지 분야에 20조원 투자 예정
- 정부의 『7대 선도 프로젝트*』 등 AI 관련 첨단기술 분야 지원이 본격화되고,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등 중소기업 관련 AI 지원도 확대 기대
 - *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반도체의 7대 분야 대상으로 AI를 융합하여 '피지컬 AI 1등 도약'을 위한 새정부의 경제성장 전략

국내 주요기업-엔비디아의 AI 사업 계획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제조 AI 팩토리 건설, 제조全流程을 AI로 관리 • 디지털 트윈 기술(가상 공간에서 실제 공장 재현)을 글로벌 공장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제조 AI 클라우드' 구축 • 스타트업·공공기관 등 외부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차·로봇 개발, AI 팩토리 구축에 AI 중점 활용 • AI 기술센터,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등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플랫폼 공동 개발 •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제조 산업에 AI 기술 지원

자료 : 언론보도

정부·민간의 AI 투자 현황 및 계획

구분	내용
AI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25.2월) 및 세계 최대 반도체 도시(용인) 구체화 • 삼성·SK-Open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 HBM 공급 확대 • 리벨리온·퓨리오사 등 'K-AI 반도체'의 AI 생태계 영향력 확장
AI 인프라·데이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SK·빅테크 기업 협력, 울산·전남·포항 등 지역에 AI 데이터센터 구축 •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재생에너지·냉각장치 투자 증가 • AI 고속도로 등 민간설비 투자 확산 및 서비스 산업 협력 증대
제조 AI-AX (피지컬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대 선도 분야에서 예산·세제·금융·규제에 관한 토탈패키지 지원 • AI 기반 스마트제조 혁신 3.0 전략 추진(중소 스마트공장 1.2만개 보급 등) • 지역특화 산업별 맞춤형 중소기업 AI 전환 지원(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자료 : 언론보도, 중소벤처기업부

□ [이슈] 2026년 주요 산업 키워드 : ② K-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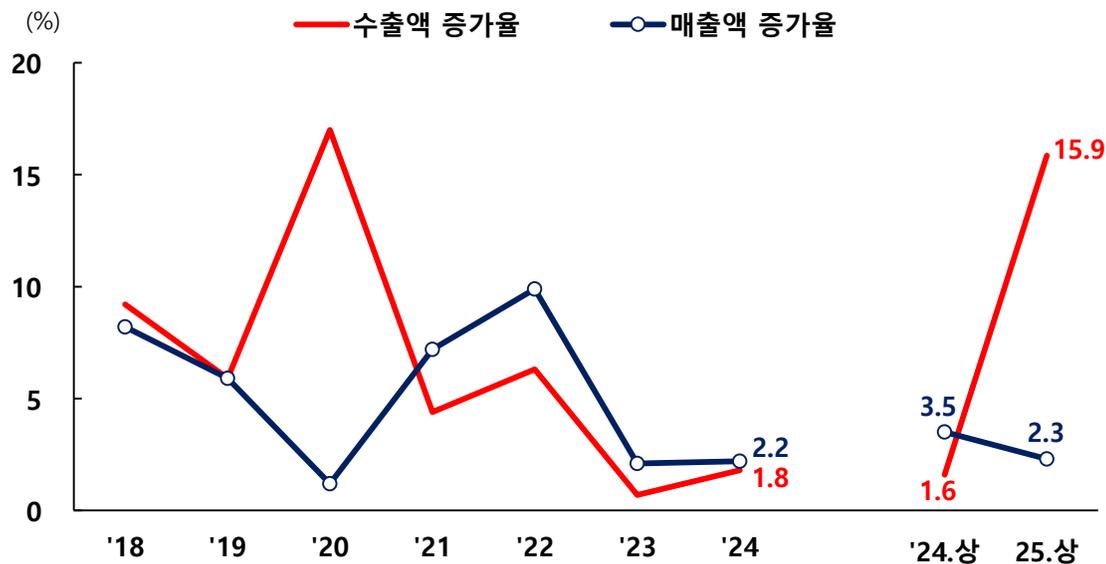
최근 K-POP, K-드라마 인기로 콘텐츠 분야 수출 확대,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서 한국의 브랜드 위상 제고

- '25.상반기 방송·영상, 음악 산업을 중심으로 전체 콘텐츠 관련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5.9% 증가, 국내 수출 비중이 가장 큰 게임(50%)은 수출 감소
 ※ K-콘텐츠 분야별 수출증가율('25.상, %, 전동비) : (방송영상) 65.1, (음악) 62.9, (지식정보) 31.2, (게임) △0.9, (만화) △4.3, (영화) △11.5
- “K-POP 데몬 헌터스('25.6 공개)”에 韓이 직접 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요소(한복, K-POP 스타일)가 '낙수효과'를 통해 큰 상업적 효과 창출
 ※ 소니픽처스가 제작, 제작비 전액(1억달러) 및 수수료(0.25억달러)를 받고 IP를 넷플릭스에 판매, 모든 파생수익은 IP(1조원 이상으로 평가)를 소유한 넷플릭스가 독점

K-콘텐츠의 성장세가 패션·뷰티·식품·관광 등 문화수출을 촉진, 경제의 新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 K-콘텐츠의 인기 상승은 한류로 인한 방송, 음악산업 등의 수출을 증대 시키고, 관련 산업 분야(식료품, 화장품, 의류 등)까지 긍정적 외부효과 유발
 ※ K-콘텐츠 1억 달러 수출 시 소비재 수출이 1.8억 달러 증가하며 생산유발 효과는 5.1억 달러에 달하는 수준(한국수출입은행)
- 정부도 2030년까지 K-컬처를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 시장 규모 300조원을 목표(현재 157조원, 연평균 11.3%)로 정책 로드맵 수립·실행
 ※ '25.10.1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세계적 K-POP 공연장 건립 등 K-콘텐츠(음악, 게임, 웹툰·애니, 영상 등) 산업 육성 계획

콘텐츠 관련 산업 수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주 : 전년 동기 대비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삼정KPMG경제연구원

K-POP 데몬 헌터스의 산업 부문별 파급효과

구분	주요 정책
관광 및 호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관광객 중 한류관광객 비중(%) : 9.3('24) → 11.3(케데헌 공개 후) • 국립중앙박물관 8월 누적관람객수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 박물관 온라인 샵 일일 방문자(명) : 7천(공개 전) → 60만명(공개 후)
식품 및 소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데헌 출시 이후 구글 트렌드 '한식' 검색량 75% 상승 • CU 품목별 매출액(7~8월, 전동비) : 김밥 231%, 라면 99%, 상온 즉석식 143% 증가 • 세븐일레븐 공항 소재 점포의 외국인 김밥 매출(7~10월) 120% 증가
화장품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3분기 화장품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17.5% 상승 (85억달러) • 화장품 수출 사상 처음으로 '25년말까지 100억달러 돌파 예상

주 : K-POP 데몬 헌터스 Netflix 공개일은 '25. 6. 20.
 자료 : 언론보도

□ [이슈] 2026년 주요 산업 키워드 : ③ 에너지(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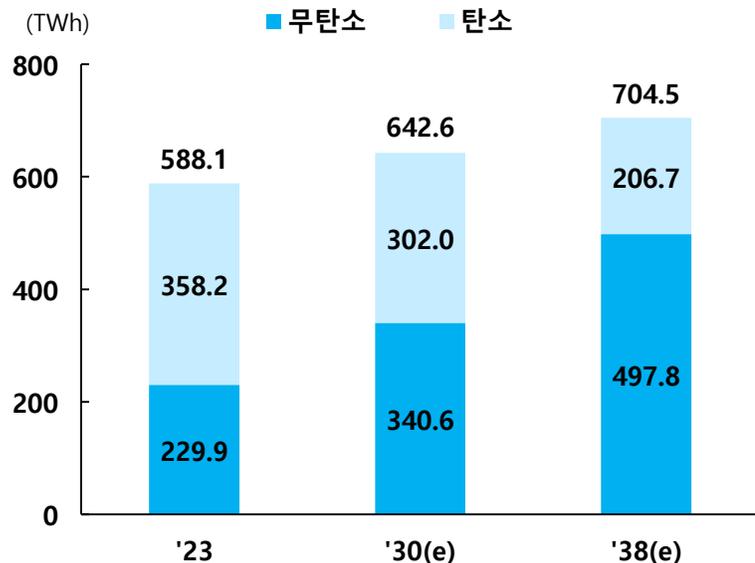
첨단산업·AI 데이터센터 관련 전력 수요 증가 전망, 안정적 전력 공급이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 **(첨단산업)** 세계 최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관련 대규모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최대 16GW*) 필요, 안정적 전력 공급이 생산 안정성과 직결
* 반도체 클러스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대 순간 전력 필요량, 일반 원전 1기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순간 전력은 1GW 수준
- **(AI 데이터센터)** 한전 대비 저렴하고 자체 발전이 가능한 안정적 전력망 확보를 위해 SK와 AWS는 AI 데이터센터 입지로 울산을 선정
※ OpenAI도 유사한 이유로 포항(삼성SDS)과 전남(SKT)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계획 중, 향후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신규 입지는 지방지역 위주로 선정 예상
- **(수급계획)** 정부는 무탄소 전원(재생·원전 등) 중심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여, 탄소 중립 실현 및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 예정

분산에너지 확대, 전력수급 안정화 및 RE100 등 전력 이슈가 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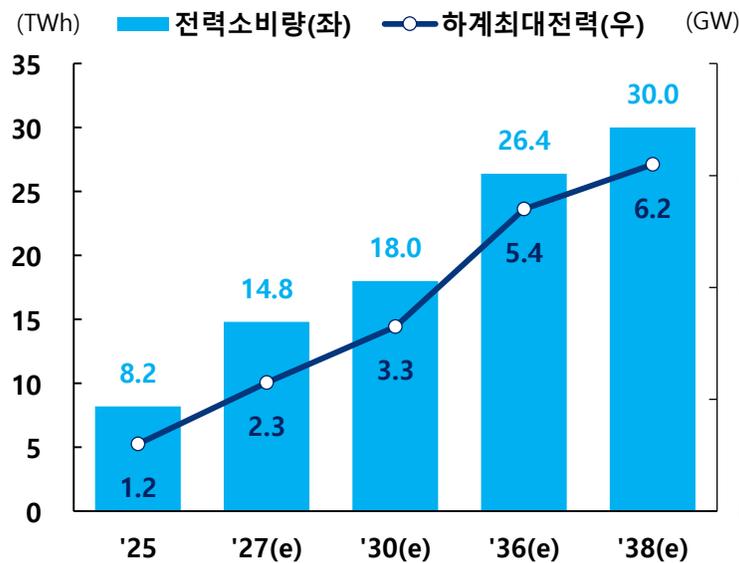
- **(분산에너지)**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 조성 시 송전망 과부하·전력난 문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지에서 전력 생산 노력 확대 예상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現 중앙집중식 공급과 달리 에너지 사용지역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분산에너지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를 확보하고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 목적
- **(전력수급)** 전력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차등 부과에 대한 논의도 활발, 향후 발전 대비 전력 수요가 큰 수도권의 가격 상승 가능성 높
- **(RE100)** RE10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사용)에 대기업 참여(삼성·LG·SK·현대 등)로 재생에너지 확보 비용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전망

전원별 발전량 전망



주 : 탄소(석탄+LNG+신에너지+기타)
무탄소(원전+재생에너지+청정수소+암모니아)
자료 : '24~'38년 적용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참고 제작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영향



주 : 30TWh는 1.4GW급의 원전 3기가 연간 발전하는 양
자료 : 산업통상부

국내 첨단산업·데이터센터 사례

구분	프로젝트 주요 내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SK하이닉스(27.5), 삼성전자(31)가 반도체공장 준공 예정 ▪ 산업단지 내 LNG 열병합발전소 및 송배전 시설 증설 ▪ 향후 16GW의 전력공급이 필요할 예정 ▪ 국가 그리드형 전력 프로젝트의 대표 사례 * 그리드형태: 자체 전력조달 + 국가전력망(한전) 사용
울산 AI 데이터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와 AWS가 합작,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 ▪ AI 데이터센터 중심으로 향후 103MW(29년)의 전력필요 ▪ 자체발전+직공급, 분산전원으로 계통부담이 완화된 형태 ▪ SK멀티유틸리티가 필요전력 공급, 한전보다 저렴 ▪ 분산형 안정모델의 대표 사례

자료 : 언론보도

□ [이슈] 2026년 주요 산업 키워드 : ④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AI를 이을 산업 분야 게임체인저로 기대되는 양자컴퓨팅*은 노벨물리학상 수상·JP모건의 대규모 투자로 주목

* 기존 컴퓨터의 이진수(0,1)체계를 대신해 양자비트(0과1의 중첩, 얽힘)를 이용, 병렬로 정보를 처리하여 난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컴퓨팅기술

- '24.12월 구글은 양자칩 "윌로우(슈퍼컴퓨터가 10²⁵년이 걸리는 계산을 5분 만에 처리)" 공개 및 양자오류수정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높임

美·中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술패권 경쟁 중, 韓 후발주자로 기술 개발과 산업생태계 조성 노력 진행 중

- 미국은 양자기술을 전략 자산으로 간주, 마이크로소프트·구글·IBM·아이온큐 등 빅테크를 중심으로 투자와 함께 실질적인 응용 분야 개발에 집중
- 중국은 '18년부터 양자 분야에 적극 투자, 중국과학기술대학·오리진퀀텀 등이 연구에 참여하며 통신 위성 기술 분야에 성과를 보임
- 국내의 경우 '21년부터 국가전략플랜을 토대로 연구·인력양성·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연구기관(KAIST, ETRI) 및 대기업(삼성, LG)이 연구를 진행

'26년은 양자이득*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며 산업 분야 적용 가능성이 점진적 확대될 전망

* 양자이득(Quantum advantage) : 양자기술(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싱 등)이 기존 기술로는 어려운 특정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기술적/산업적으로 실질적 이점을 제공하는 것

- '25.9월 HSBC는 IBM 헤론(Heron)을 활용, 유럽 회사채 시장에서 채권거래 예측 정확도를 34% 향상시킨 실험에 성공하여 금융권 활용 가능성 입증

국가별 양자컴퓨팅 투자 및 개발 현황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M은 양자 하드웨어 개발을 선도, '25년까지 4000큐비트 규모 양자컴퓨터 실현을 로드맵으로 제시 • 구글은 '19년 양자우월성 실험을 발표, 현재는 오류보정 기술 연구에 집중 • MS는 위상(topology)양자비트에 대한 큐비트 연구를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주도의 CAS 산하 연구소들이 기업들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 • 화웨이는 양자암호통신 장비 개발, 오리진퀀텀은 반도체 양자칩을 개발 중 • 국가 자연과학기금 조례를 개정, '25년 과학기술 예산을 전년 대비 10% 증가시키며 양자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IST는 양자컴퓨팅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연구를 선도,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목표 • ETRI는 양자 암호 기술 개발을 주도, 양자 키 분배기술을 연구하여 보안성을 강화 • 삼성전자는 반도체분야에서 양자효과를 활용한 소자 연구를 진행 • LG전자는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및 소재 개발 연구를 진행

자료 : 양자전략위원회, McKinsey Digital, 언론 종합

산업별 양자컴퓨팅 적용 사례

구분	주요 내용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oldman Sachs는 양자알고리즘을 통해 옵션가격 책정 모델을 개선 • JP모건은 거래 전략 최적화를 위해 양자컴퓨팅을 도입 • HSBC는 채권 거래 예측 실험에 적용, 금융권 활용 가능성을 높임
제약·생명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이자는 IBM과 협력, 신약 개발과정에 양자 컴퓨팅을 도입하여 연구 진행 • 머크는 분자 상호작용 분석을 통해 항암제 개발을 가속화 • 모더나는 양자컴퓨팅과 AI를 활용, mRNA 의약품 연구를 진행
제조업·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신소재를 개발 • DHL과 FEDEX는 양자컴퓨팅을 복잡한 물류 경로 최적화에 시범 도입 중
에너지·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와 엑슨모빌은 에너지 생산 모델링과 최적 자원 배분에 양자머신러닝을 적용, 탄소배출 최소화 설계 • NASA는 IBM과 협력, 기후 데이터 분석에 양자 시뮬레이션을 도입 및 활용

자료 : 언론 종합

3. 중소기업·소상공인환경

중소기업 경기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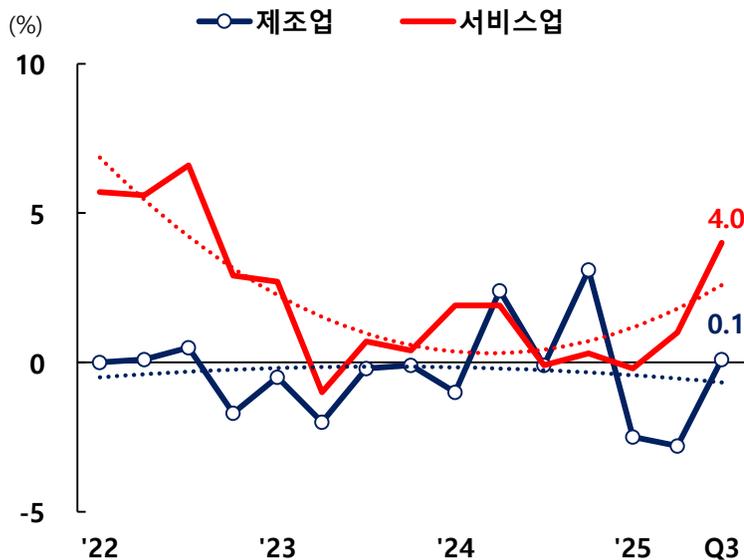
(현황) 주력 산업 수출 증가에도 중소제조업 생산은 다소 정체, 서비스업은 민간소비 개선에 힘입어 반등

- (제조업) 하반기 들어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며 생산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반도체, 조선 등 수출 증가 효과가 대기업에 한정되며 격차 확대**
 - * 중소기업 재고지수 증가율(전동비, %, 국가데이터처) : 1.4('25.Q1) → 2.0(Q2) → 1.1(Q3) / ** 대·중소 제조업 생산 증가율 격차(전동비, %p, 국가데이터처) : 5.8('25.Q1) → 6.5(Q2) → 7.4(Q3)
- (서비스업) 교육서비스,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영향으로 도·소매를 중심으로 회복세 관측
 - ※ 업종별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25.Q3, 불변지수, 전동비, %, 국가데이터처) : 6.8(도·소매) > 3.1(전체) > 1.5(숙박·음식점) > △1.0(교육서비스) > △1.2(부동산)

(전망) 내수 부진 완화에도 관세협상 타결의 온기가 일부 업종에 제한, 전반적인 회복 강도는 미약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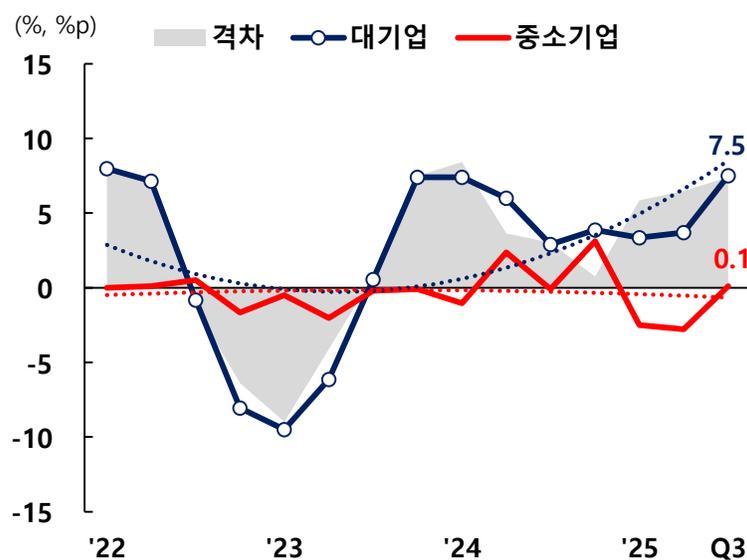
- 내수경기 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리 하락에 따른 기업 심리 회복으로 생산은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밀어내기 수출 등 선제적 효과가 축소되고 관세협상 제외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위축되며 생산 회복 속도를 제한할 전망
 - ※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50% 관세율이 유지되고 있어 관련 소부장 중소기업 피해 우려

중소기업 생산지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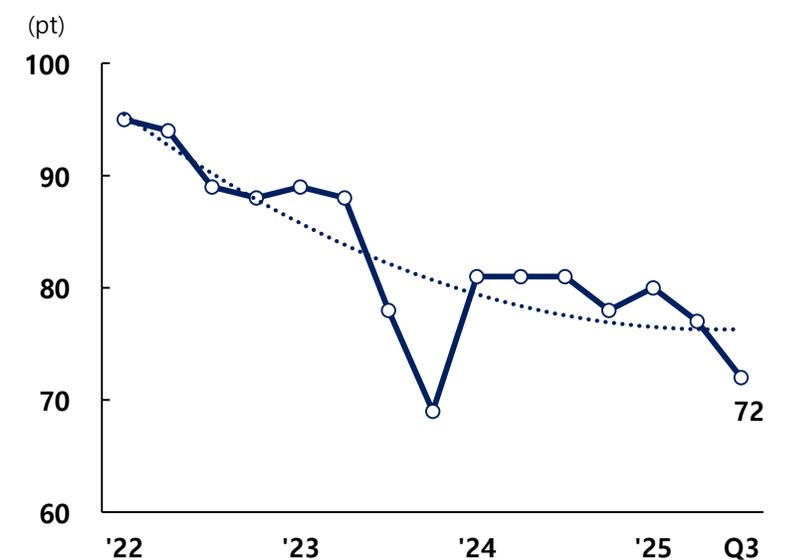
주 : 전년 동기 대비, 점선은 추세선
자료 : 국가데이터처

대·중소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



주 : 전년 동기 대비, 점선은 추세선
자료 : 국가데이터처

중소기업 수출전망 BSI



주 : 경기악화<100<경기호전, 점선은 추세선
자료 : 한국은행

중소기업 경기 [투자]

(현황) 지방 건설경기 부진 심화 및 내수·통상환경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으로 건설·설비투자 모두 부진

- 지방 중심 미분양 적체로 중소건설사 투자여력은 더욱 악화, 반도체장비 등 일부 업종 호조가 대기업에 집중되며 설비투자 실적도 하락 추세
- 시설자금대출 증가율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기전자·기계·비금속을 중심으로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또한 저조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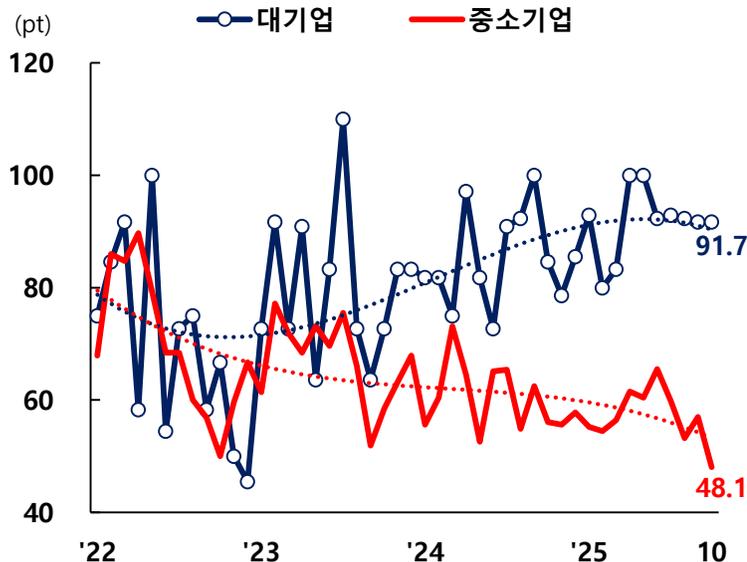
* 중소기업 시설자금대출 증가율(전동비, %, 한국은행) : 6.6('24.Q2) → 6.2(Q3) → 5.8(Q4) → 5.2('25.Q1) → 4.1(Q2)

** 주요 산업단지 업종별 평균가동률('25.Q2, %, 한국산업단지공단) : 70.2(전기전자) < 73.9(기계) < 74.4(비금속) < 77.2(전체)

(전망) 정책 지원·관세협상 타결에도 국내 투자 감소 우려 상존, 업종별 공급망·시장 상황에 따라 차별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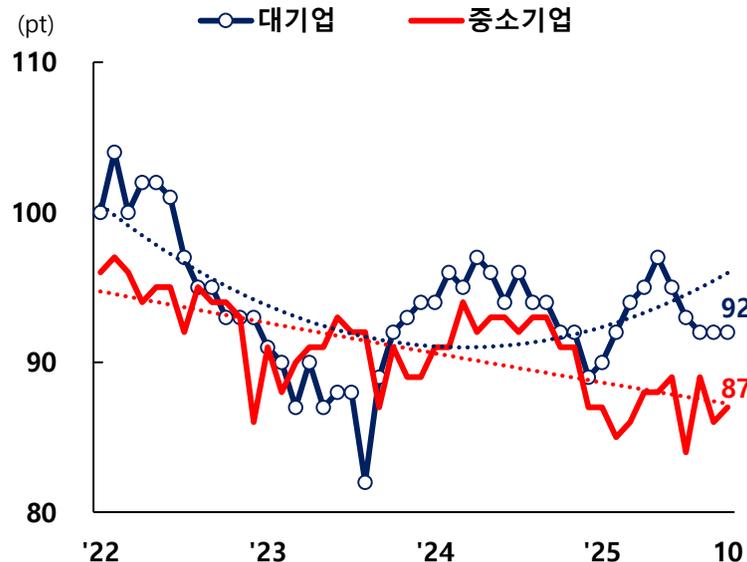
- 자본 조달 여건 완화 속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건설수주 반등 및 친환경 신규투자 지원으로 관련 업종 중심 소폭 개선 기대
 - ※ 'SOC' 분야 예산 증가율(전동비, %, 기재부) : 5.2('24) → △3.6('25) → 7.9('26)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 증가율(전동비, %, 기재부) : 4.9('24) → 1.1('25) → 14.7('26)
- 다만, 관세협상 타결로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산업 대기업 투자가 해외를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 관련 국내 중소 소부장 협력사 설비투자 위축 심화
-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은 공급 과잉, 경쟁 격화 등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로 보수적 자금 운용이 불가피, 첨단 신사업 투자에 어려움
 - ※ 중소기업은 신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 '신사업 시장전망 불확실성'(43.7%), '추진자금 부족 및 조달 애로'(41.8%) 등을 지목(신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25.8월, 대한상의)

건설경기 실적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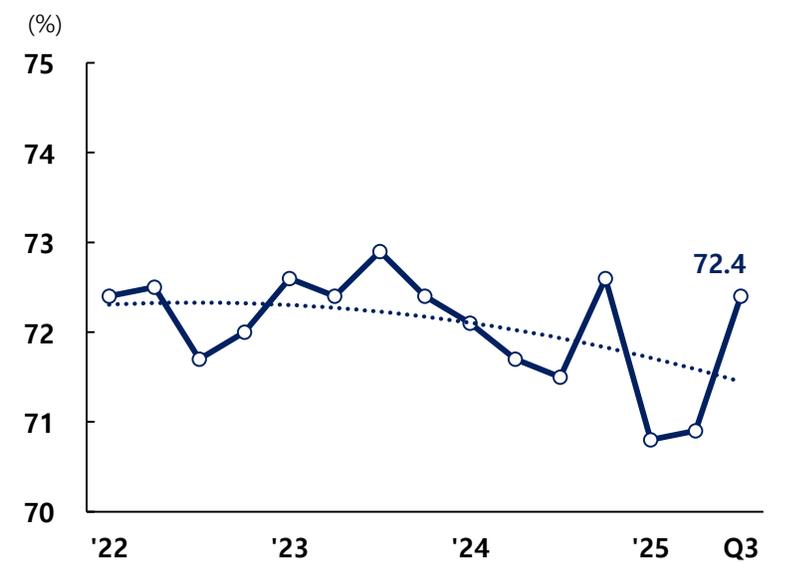
주 : 건설경기 비관<100<건설경기 낙관, 점선은 추세선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비투자 실적 BSI



주 : 계획대비 수정감액<100<계획대비 수정증액, 점선은 추세선
자료 : 한국은행

중소제조 평균가동률



주 : 점선은 추세선
자료 : 국가데이터처

중소기업 경기 [자금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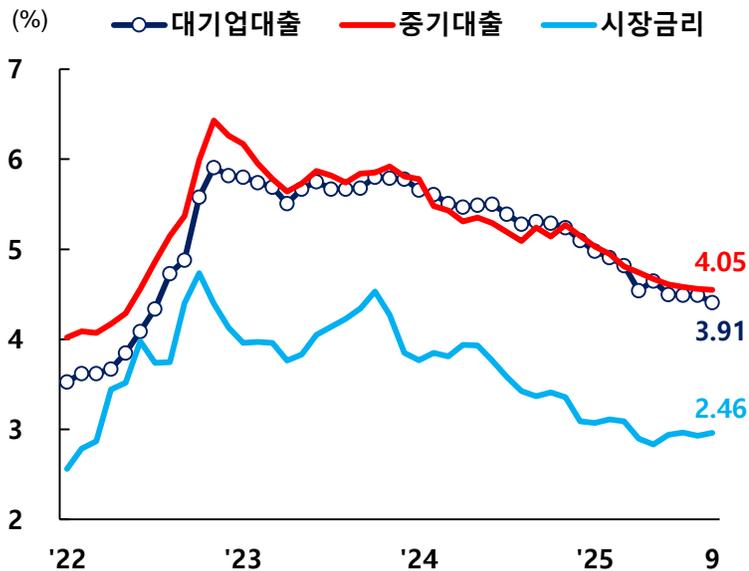
(현황) 대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회복 지연으로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전년대비 악화

- 시장금리 하락과 한국은행 저리 지원에 힘입어 차입 비용 자체는 하락했으나, 은행의 대출태도 악화로 전반적인 차입여건 개선은 미미
 - ※ 금년 들어 중기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 그러나 금융지주는 밸류업 추진, 환율상승 등으로 보통주 자본비율 관리를 위해 위험가중치가 높은 저신용 중기대출 취급 축소
- 한편, 매출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감소,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곤란한 주된 원인('25.9월, 복수응답, %, 중기중앙회) : 64.0(판매부진) > 33.7(원·부자재 가격 상승) > 24.4(인건비 상승) > 17.5(판매대금 회수 지연)

(전망) 정책 지원으로 중소기업 간 조달여건 양극화가 다소 완화되며 전반적인 자금사정 소폭 개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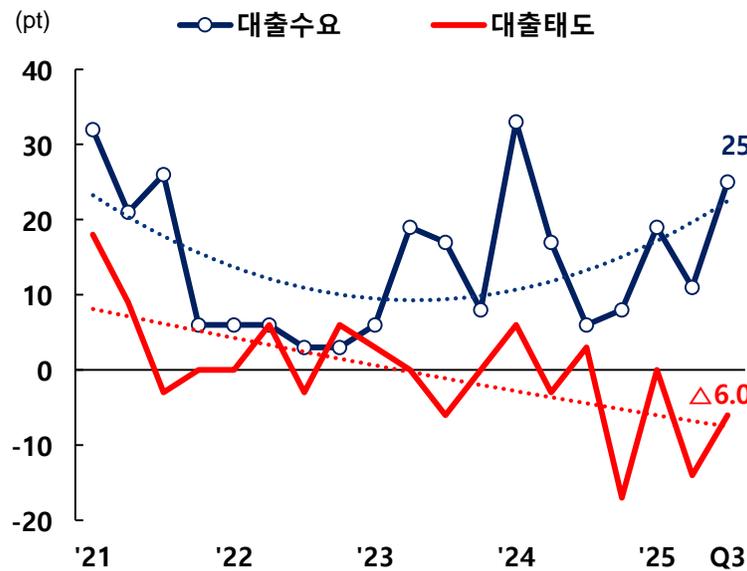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기업 지원 및 혁신·벤처 중심 금융 공급을 요구하는 정책기조에 맞춰 자금 조달여건 완화 예상
 - ※ 정부는 부동산에서 첨단·벤처·혁신 기업으로 자금흐름 대전환을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추진방향 발표(9.19), 중소기업대출 공급실적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예고('26.上 시범운영)
- 다만, 실적부진이 누적된 가운데 대기업 원가절감 요구 및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비용 상승은 중소기업 수익성 및 내부 자금사정 개선을 제한

예금은행 대출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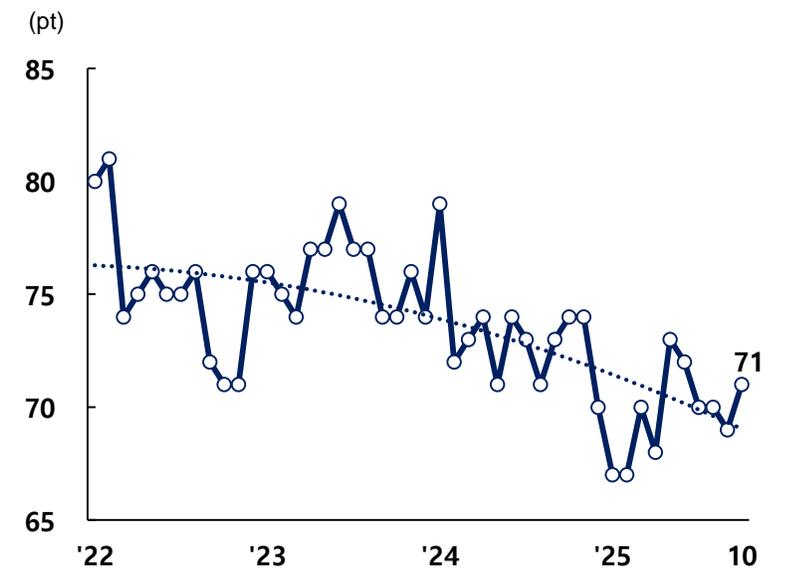
주 :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시장금리는 국고채 3년물, 점선은 추세선
자료 : 한국은행

중소기업 대출수요 및 대출태도



주 : 대출수요 감소<0<증가, 대출태도 강화<0<완화, 점선은 추세선
자료 : 한국은행

중소기업 자금사정 실적 BSI



주 : 악화<100<호전, 점선은 추세선
자료 : 한국은행

중소기업 경기 [소상공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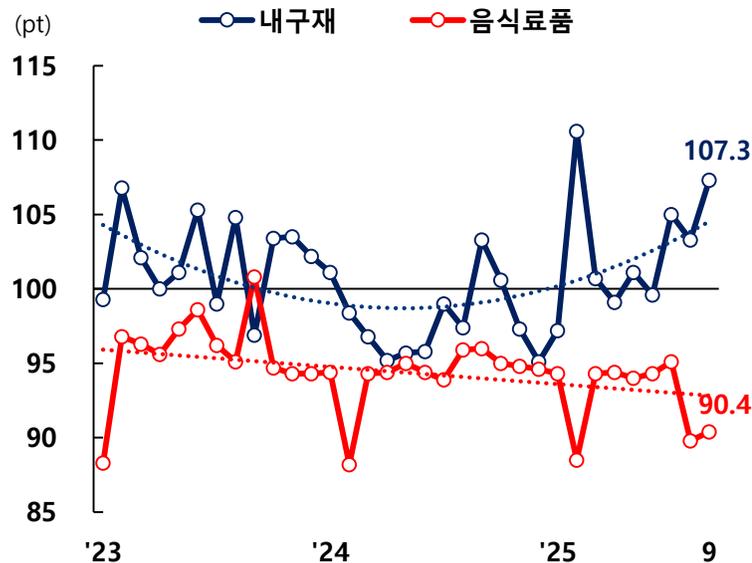
(현황) 소상공인 매출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심리 측면에서는 일부 회복 조짐 관측

- 내수 소비 회복은 내구재에 집중, 숙박·음식점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은 매출 하락세를 지속*, 취업자 통계 기준 자영업자 수 또한 2년 연속 감소**
- * IBK 개인사업자 카드 매출 증가율('25.Q3, 전년비, %, IBK) : $\Delta 6.6$ (숙박·음식점) < $\Delta 6.0$ (도·소매) < $\Delta 5.8$ (제조) / ** 자영업자 수(만명, 국가데이터처) : 568.9('23) \rightarrow 565.7('24) \rightarrow 560.1('25)
- 체감경기 또한 여전히 침체 국면이나 전년대비로는 전 부문에서 소폭 개선되는 흐름, 하반기 이후 민생회복 지원 효과도 일부 기대
- ※ 소상공인 체감BSI(9월, 감소<100<증가, pt, 중기부) : (경기전반) 65.6('24) \rightarrow 76.6('25) / (매출) 70.0('24) \rightarrow 77.4('25) / (자금사정) 68.9('24) \rightarrow 77.7('25) / (구매고객 수) 69.0('24) \rightarrow 77.5('25)

(전망) 정부 소비부양책에 따른 업황 부진 완화가 예상되나, 회복세 진입을 위한 추가 모멘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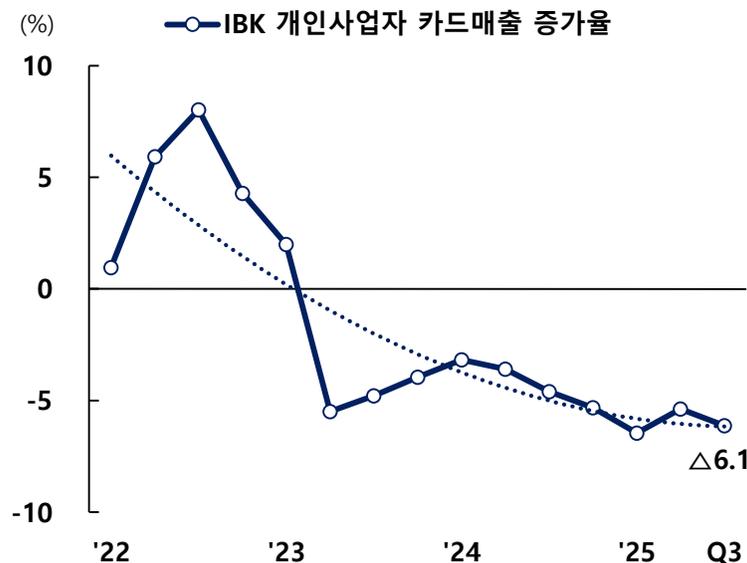
- 단기 업황은 정부의 '26년 포용금융 및 소비쿠폰 발행 예산 확대, 방한 외국인 관광수입 증가로 개선될 전망
- 다만, 불확실성에 대비한 가계의 저축률 증가, 자영업 진입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 우려가 있어, 전반적인 경기회복 없이는 회복세 안정화에 한계
- ※ 총저축률(전기비 증감, %p, 한국은행) : $\Delta 0.4$ ('25.Q1) \rightarrow 0.7(Q2) / 가계 총저축률(전기비 증감, %p, 한국은행) : $\Delta 1.9$ ('25.Q1) \rightarrow 1.9(Q2)

소매판매액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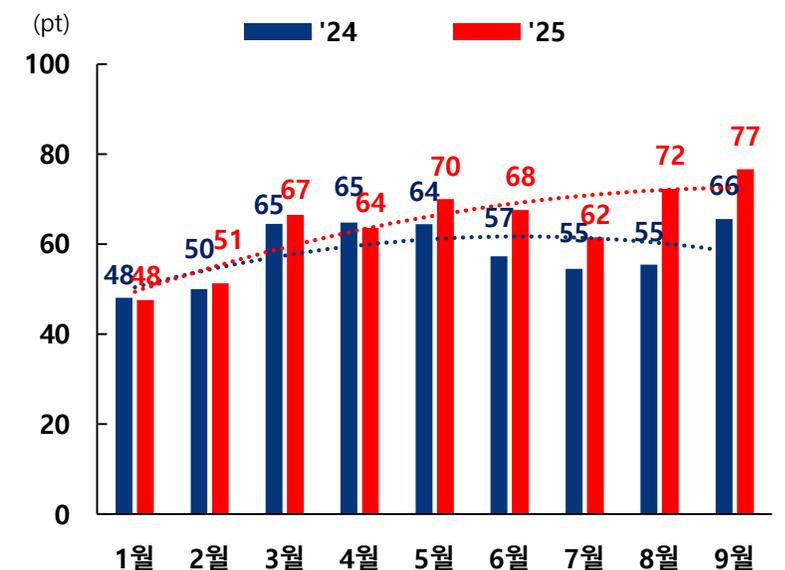
주 : 2020=100, 점선은 추세선
자료 : 국가데이터처

개인사업자 매출 증가율



주 : IBK BC카드 가맹점 전년 동기 대비 카드매출 증가율
분포의 중앙값, 점선은 추세선
자료 : IBK

소상공인 경기동향 체감 BSI



주 : 경기악화<100<경기호전, 점선은 추세선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소상공인 정책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위해 창업·벤처 및 디지털·AI 지원에 방점

- 모태펀드 출자* 및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AI 전환을 추진
* 중기부 모태조합 출자 예산 : 5,000억원('25) → 1.1조원('26 정부안) / ** 중기부 R&D 예산 : 1.5조원('25) → 2.2조원('26 정부안)
- 지역혁신선도기업 육성 강화* 등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 마련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예산 확대
* 중기부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예산 : 216억원('25) → 969억원('26 정부안) / ** 중기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예산 : 178억원('25) → 201억원('26 정부안)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폐업·재기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위기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추진

- 영세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을 위해 3.4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 '25년 추경을 통해 도입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4대 보험료, 통신비 등에 사용 가능
- 폐업부담 경감 및 재취·창업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를 강화하고*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노란우산공제 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 안전망 강화
*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 2,450억원('25) → 3,056억원('26 정부안) / ** '26년까지 약 4.2만명까지('24년 약 3만명) 단계적으로 확대 계획

중기·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지원 사업

분야	'26년 예산(전년대비 변화)	주요 확대 지원 사업			주요 신규 지원 사업
창업·벤처	4.4조원(▲8,301억원)	· 모태펀드 출자	· 창업성장기술개발(TIPS)	· 창업패키지	유니콘 브릿지
디지털·AI	3.7조원(▲5,247억원)	· R&D 지원	· 스마트공장보급	· 수출바우처	기술혁신기반조성
지역경제	1.3조원(▲547억원)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 중소기업혁신바우처	· 사업전환촉진	지역창업 페스티벌
동반성장	0.6조원(▲29억원)	· 글로벌 기업협업프로그램	·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기업승계 M&A 지원
소상공인	5.5조원(▲1,356억원)	· 경영안정바우처	· 희망리턴패키지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AI 도우미

주 : '26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기준, 예산 증가분은 '25년 본예산 대비, 주요 지원 사업은 사업별 예산 및 '25년 정부안 대비 예산 변화 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체 선별하여 기술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Research.ibk.co.kr